

2013년 세계경제전망

총괄책임 박복영 국제경제실장 (bypark@kiep.go.kr, Tel: 3460-1149)

차 례 ● ● ●

I. 2013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4. 국제통상환경

II. 2013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과 전망
2.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저성장과 정책대응
3.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영향
4.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경제정책 방향
5. 글로벌 저성장하의 자원부국 경제

III. 2013년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2. BRICs 경제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주요 내용 ●●●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엔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 -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과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I. 2013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가. 2012년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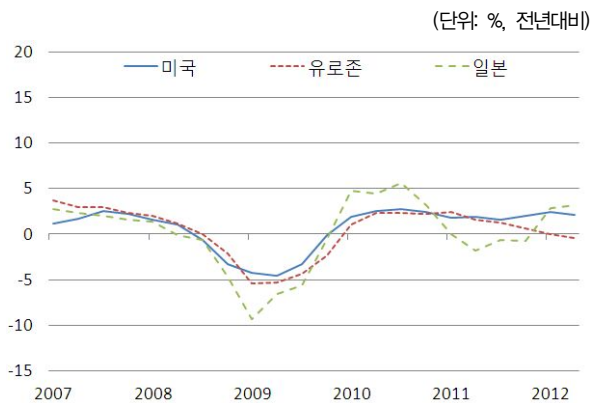
■ 201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반 부진으로 연초 기대에 비해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 KIEP은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2011년 12월)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3.1%로 전망함.
- 세계경제는 상반기 3.4% 성장하였으나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되어 2.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3.1%의 세계경제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심화가 이러한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임.

■ (선진국) 재정위기 해결 지연으로 인해 유로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미국과 일본의 회복세도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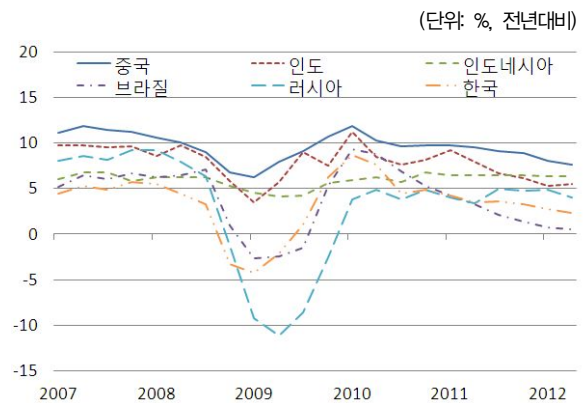
- 유로지역은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두고 역내 국가들 간 합의 도출이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2012년 -0.5%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상반기 2.4% 성장을 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용과 주택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상반기에 내수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3%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정책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회복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어 연 2.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 (신흥국)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됨.

-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중국은 2/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연 7.8%의 성장이 전망됨.
- 아세안 4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5.4%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2년		2013년
	2011년 12월 전망	2012년 10월 전망	
세계 ¹⁾	3.5	3.1	3.4
미국	1.9	1.9	1.8
중국	8.5	7.8	8.3
일본	2.1	2.2	1.4
유로	0.2	-0.5	0.7
-독일	0.8	0.8	1.6
-프랑스	0.3	0.2	1.1
영국	0.6	-0.4	1.3
브라질	3.5	1.5	4.2
인도	7.6	5.7	6.5
러시아	4.4	3.8	4.0
ASEAN4 ²⁾	5.3	5.4	5.4
-인도네시아	6.2	6.1	6.1
-말레이시아	5.0	4.3	4.4
-필리핀	4.8	5.0	5.5
-태국	4.1	5.1	4.6

주: 1) PPP 환율 기준.

2)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GDP, PPP 기준.

나. 2013년 세계경제 전망

■ KIEP 2013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됨.

- 2013년 연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12달러로 가정하였음.
-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예산통제법에 의해 자동 삭감될 예정인 재정지출 항목을 기준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전망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부시 감세안과 급여세 인하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였음(본 보고서 22~26쪽 참고).
-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2013년 회원국들의 긴축조치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구제금융기금(ESMF) 설립으로 일부 국가의 디폴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는 점을 반영하였음.

- 포르투갈의 2차 구제금융 신청 및 채무탕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회원국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개혁조치가 점진적으로 진전(muddling through)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연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기존 시나리오에서 배제하였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대형국가 가 동시 다발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였음.
- 중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배제하였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가정하였음.

■ 2013년 세계경제는 2012년보다 다소 높은 3.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13년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2년보다 높은 이유는 올해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지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임.
- 유로지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0.5%)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엔 재정위기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0.7%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12년부터 시작된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7.8%) 보다 0.5%포인트 높은 8.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개혁개방정책의 효과로 올해(5.7%)보다 높은 6.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도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와 대외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고려할 때, 올해의 저성장(1.5%)을 벗어나 4.2%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올해(1.9%)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유로지역 경기회복과 유가의 소폭 상승을 가정할 때 올해(3.8%)보다 다소 높은 4.0% 성장이 전망됨.
- 일본은 내수회복 부진으로 올해(2.2%)보다 낮은 1.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에도 여전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향방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임.

- 이러한 위험 요인의 향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로 전개될 경우 하방 위험이 매우 높음.
- 이 외에도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 경제와 국제 상품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과잉 유동성은 유가 등 국제상품시장 가격 불안정과 신흥국의 환율절상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낮아지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3.0%까지 하락할 수 있음.

- 기준 전망에서는 재정절벽 요인 중 기존 감세조치가 양당 간 합의에 의해 연장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이 시나리오는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와 더불어 감세조치까지 연장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음.

-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까지 이어지면서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 성장률은 -0.3%까지 낮아지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도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② 포르투갈의 2차 구제금융 신청, ③ 스페인의 금융부실 심화 등 신용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금융시장의 동요와 신용경색 현상이 재현되면서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나 정치적 사건을 촉발제로 하여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적 효과 외에도 유로존에 대한 신뢰도 저하, 금융시장의 패닉 현상 등 간접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경기침체는 남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 등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북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지역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의 성격이 짙은바,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이 증폭될 경우 위기확산과 경기심리 악화로 추가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 기초가 형성된다면 유로지역 성장률은 1.3%까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도 3.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은행동맹, 성장재원의 공동마련 등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조치가 실시되고 국채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며, 이는 실물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기 회복과 중국경제의 성장세 시현 등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될 경우 대외수요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이는 역내무역을 통해 남유럽 경제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2013년 각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3년			
	기준 전망치	미국 재정절벽 시나리오	유로지역 비관적 시나리오	유로지역 낙관적 시나리오
세계 ¹⁾	3.4	3.0	3.0	3.6
미국	1.8	0.2	1.4	1.9
중국	8.3	7.9	7.9	8.5
일본	1.4	1.3	1.2	1.5
유로	0.7	0.6	-0.3	1.3
-독일	1.6	1.5	0.5	2.3
-프랑스	1.1	1.0	0.2	1.9
영국	1.3	1.2	0.7	1.4
브라질	4.2	4.1	3.9	4.3
인도	6.5	5.9	5.9	6.7
러시아	4.0	3.8	3.1	4.3
ASEAN4 ²⁾	5.4	5.1	5.1	5.5
-인도네시아	6.1	5.9	5.8	6.2
-말레이시아	4.4	4.2	4.1	4.6
-필리핀	5.5	5.3	5.4	5.6
-태국	4.6	4.4	4.3	4.8

주: 1) PPP 환율 기준

2)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GDP, PPP 기준.

2. 국제금융시장

가. 주요국 환율

1) 2012년 동향

■ 주요국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선진국 추가 통화정책 완화에 따라 등락

- 미국달러는 올해 4월 말부터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이다 9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응책 발표와 미 FRB의 추가 양적완화 시행으로 인해 하락하였음.
- ECB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지난 9월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1~3년 만기 단기물을 중심으로 무제한 국채를 매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9월 12~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매월 모기지담보증권(MBS)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입을 통한 제3차 양적완화(QE3)와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지속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였음.
- 스페인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등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201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라 8월 이후 상승하였음.
- 엔/달러 환율은 2012년 들어 전년에 비해 상승하다가 7월 이후 안전자산 선호와 미국과 유럽의 통화완화정책 시행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락하여 엔고현상이 지속되었음.
- 지난 4월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둔화와 경기위축으로 위안화 수요가 감소하면서 미국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였음.
- 위안/달러 환율은 전년말 대비 1.5%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한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강세에 따라 하락하여 9월 말 현재 전년말대비 0.2%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주: *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자료: Bloomberg.

그림 4. 달러/유로,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원/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상승하였다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하락

-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회피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185원까지 상승하였음.
- 8월 이후에는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ECB의 국채매입 결정으로 인한 유럽 재정위기 진정, 미국의 QE3 시행에 따른 달러 약세 현상 등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였음.

2) 2013년 전망

■ 주요국의 추가 통화완화정책 시행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전망

- 글로벌 정책공조와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하여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일본도 추가 통화완화정책 시행에 나서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행(BOJ)은 9월 18~19일에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 및 엔화강세 저지를 위해 10조 엔(약 1,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2013년 상반기까지 추가 통화완화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선진국 통화에 비해 신흥국 통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

-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조달통화의 공급이 늘고 이들 국가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어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신흥국 통화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 유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신흥국의 수출 및 경기위축이 예상되어 신흥국 통화수요 확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신흥국의 통화완화정책 시행 및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있어 신흥국 통화 강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2013년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이 예상되나 대외불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2013년에는 주요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대외 신인도 개선에 따른 원화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확대,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이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화가치는 대외경기 상황과 투자심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함.

- 국제금융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3년 상반기 중에는 평균 1,105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3. 주요 금융기관의 환율 전망치

금융기관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위안/달러		
	Q4 12	Q1 13	Q2 13	Q4 12	Q1 13	Q2 13	Q4 12	Q1 13	Q2 13	Q4 12	Q1 13	Q2 13
Barclays(10/5)	1,150	1,100	1,075	86	88	89	1,20	1,17	1,16	6,35	6,30	6,27
JP Morgan(10/5)	1,125	1,125	1,110	78	79	79	1,30	1,30	1,32	6,32	6,32	6,30
Credit Suisse(10/3)	1,110	1,104	1,097	77	78	79	1,23	1,22	1,21	6,32	6,28	6,24
HSBC(10/2)	1,120	1,110	1,100	74	72	72	1,35	1,37	1,38	6,30	6,28	6,26
ANZ(10/1)	1,100	1,090	1,080	76	76	76	1,25	1,27	1,30	6,30	6,25	6,20
Standard Chartered(9/27)	1,100	1,070	1,070	82	83	84	1,27	1,23	1,21	6,31	6,29	6,27
Nomura Bank(9/24)	1,120	1,115	1,110	82	83	85	1,28	1,25	1,20	6,30	6,29	6,28
Citigroup(9/20)	1,126	1,134	1,138	77	77	76	1,27	1,20	1,15	6,33	6,34	6,35
BNP Paribas(9/18)	1,100	1,080	1,050	77	76	76	1,35	1,32	1,35	6,30	6,27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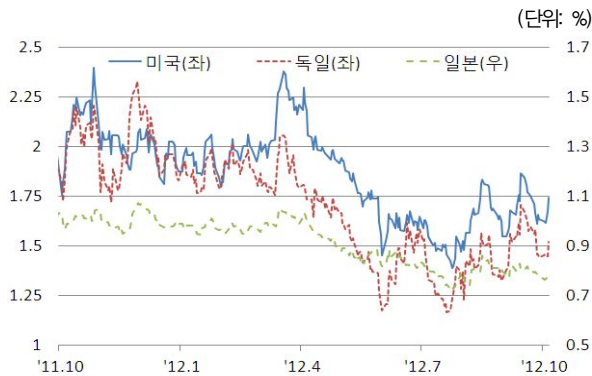
주: 2012년 9월 14일~10월 5일 사이의 전망치이며 () 안은 전망치 발표일.
자료: Bloomberg.

나. 주요국 금리

1) 2012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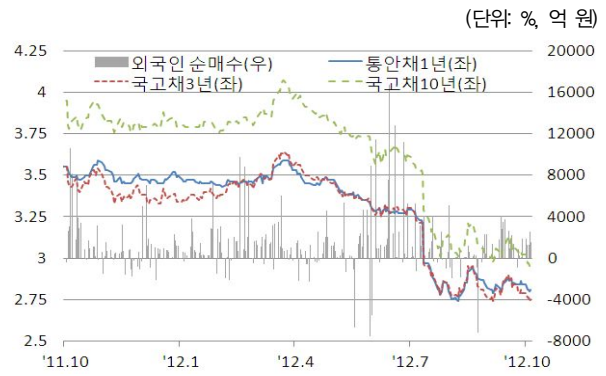
- 초저금리 정책 지속과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주요 선진국의 국제금리가 하락
 -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각각 0~0.25%, 0.1%의 초저금리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경우 재정위기 심화와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75%로 25bp 인하하였음.
 - 또한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각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국 국제금리는 4월 이후 하락하여 7월에 일제히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다가 최근 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 지속으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
 -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25bp 인하한 이후 우리나라 주요 채권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급격히 하락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와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대외신인도 개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한 원화채권 수요 증가로 채권금리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1년 만기 통안채 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7월 이후 기준금리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림 5. 주요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6. 우리나라 주요 채권금리



주: 외국인 순매수는 상장채권 기준(결제 기준).
자료: Bloomberg.

2) 2013년 전망

■ 2013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세계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요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이 불가피함.
- 유럽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가능성,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주요국이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 예상되어 주요국 국채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최근 FOMC에서 QE3 시행을 발표하면서 향후 노동시장 전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MBS 매입 지속과 더불어 물가 안정 범위에서 추가 자산매입 등 다른 정책수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유럽 재정위기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자산인 주요국 국채 수요는 지속될 전망

- 국제금융기관들은 주요 선진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가 현재의 사상 최저수준에 비해서는 점차 상승할 것이나 미국과 독일의 경우 2% 이하, 일본의 경우 1%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 주요 금융기관의 금리 전망치

		(단위: %)				
		현재	4Q 12	1Q 13	2Q 13	3Q 13
미국	기준금리	0.00~0.25	0.00~0.25	0.00~0.25	0.00~0.25	0.00~0.25
	장기(10년) 국채금리	1.72	1.87	1.84	1.97	2.07
독일	기준금리(ECB)	0.75	0.53	0.50	0.54	0.50
	장기(10년) 국채금리	1.53	1.64	1.64	1.86	1.77
일본	기준금리	0.00~0.10	0.00~0.10	0.00~0.10	0.00~0.10	0.00~0.10
	장기(10년) 국채금리	0.80	0.93	1.04	1.06	1.18

주: 2012년 9월 17일~28일 사이의 주요 금융기관 금리전망 평균.
자료: 국제금융센터.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국채수요 지속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경기둔화 우려와 주요국의 통화완화기조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며, 대외신인도 개선, 국가신용도에 비해 높은 금리수준, 원화절상 기대 등으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의 국고채 금리수준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향후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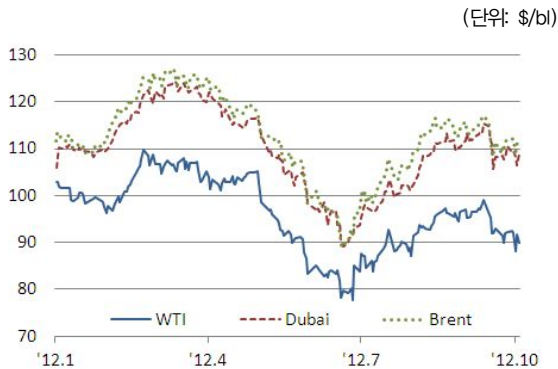
3. 국제상품시장

가. 국제유가

1) 2012년 동향

- 2012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연평균 110\$/bbl 수준으로 지난해(106\$/bbl)와 비슷한 수준임.
- 연초 국제유가는 이란의 핵 문제 및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생산차질 우려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 지속, 주요국의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90\$/bbl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그러나 7월부터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였으며, 최근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7. 국제유가 추이



주: WTI(1개월물 선물가격), Dubai(현물가격), Brent(현물가격).
자료: 뉴욕상업거래소(NYMEX);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 국제석유거래소(IPE); 국제금융센터.

표 5. 연평균 국제유가

유종	2009	2010	2011	2012*
WTI	62.16	79.64	95.15	96.14
Dubai	61.73	78.06	106.10	109.45
Brent	61.50	79.64	111.21	112.16

주: * 2012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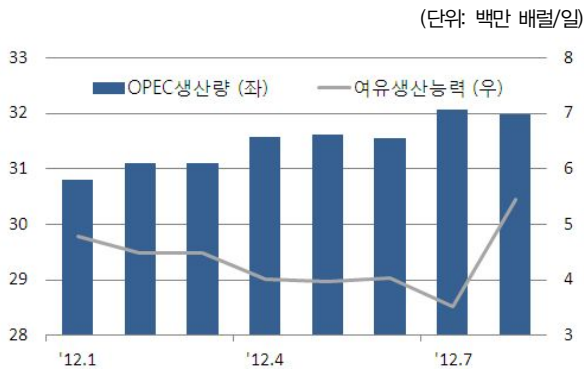
2) 2013년 전망

- 2013년 세계 원유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가 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세계 원유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4/4분기를 저점으로 2013년부터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원유수요는 2012년 8,980만 배럴/일, 2013년 9,060만 배럴/일로 전망되었음.

■ 세계 원유공급은 수요증가에 맞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OPEC에 따르면 비OPEC의 원유공급은 미국, 캐나다, 남수단 등의 생산증가로 2012년 대비 94만 배럴/일 증가한 5,409만 배럴/일 수준으로 전망됨.
- OPEC의 생산량은 이란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OPEC 생산쿼터(3,000만 배럴/일)를 상회하고 있으며, OPEC 국가들의 생산 가능량도 증가하여 여유생산능력이 제고되었음.
- 그러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시리아 내전 심화, 리비아의 반미 시위 확산 등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8. OPEC의 생산량·여유생산능력



자료: Bloomberg.

표 6. 세계 원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분	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	요	87.1	87.9	88.7	89.6
	비OPEC공급	52.3	52.4	53.1	54.1
	OPEC NGLs	5.0	5.3	5.7	5.9
	대OPEC수요	29.8	30.2	29.9	29.6
	OPEC공급 ¹⁾	29.2	29.8	-	-
공	급	86.5	87.6	-	-
재	고 변 동	-0.6	-0.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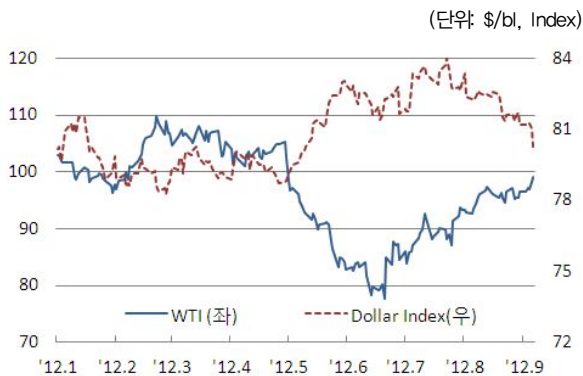
주: 1) 원유.

자료: OPEC(2012.9), 단기전망보고서(MOMR)

■ 3차 양적완화로 인한 달러 약세,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유가상승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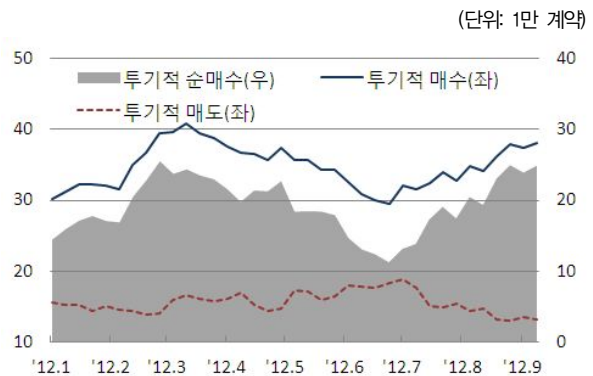
- 3차 양적완화조치 시행발표에 따른 미 달러화 가치하락(주요 통화 대비), ECB, BOJ의 양적완화정책 지속,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으로 인해 원유 선물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향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품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는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9. 국제유가와 달러인덱스



자료: 뉴욕상업거래소(NYMEX); Bloomberg.

그림 10. 원유 선물시장 투기자금 규모



주: 옵션 미포함 비상업적거래 포지션, 1계약=1000배럴.

자료: 미 상품선물 거래위원회(CF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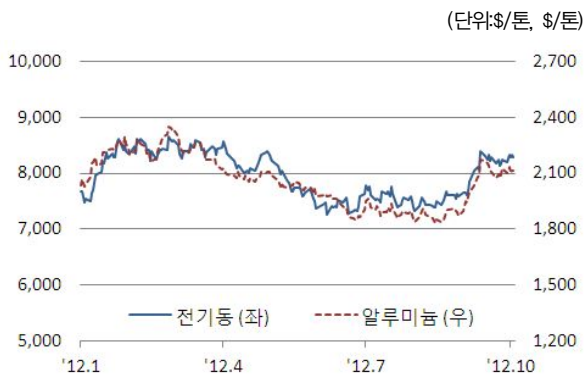
- 따라서 2013년 국제유가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세계경제가 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 원유수요가 증가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어 공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 투기자금 유입 확대는 유가상승 요인임.
- 따라서 2013년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112\$/bbl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미국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재발 등의 위험이 확대되면 90\$/bbl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음.

나.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1) 2012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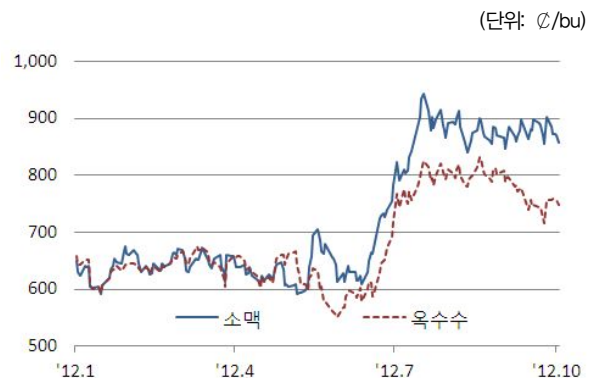
- 2012년 전기동과 알루미늄 가격은 수요부진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9.9%, 14.9% 하락
- 비철금속 가격은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하였음.
- 2012년 곡물가격은 작황여건 악화로 급상승하여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상반기에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은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지속된 가뭄으로 6월부터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조정국면에 진입하였음.

그림 11. 비철금속 가격 추이



주: 3개월물 선물가격.
자료: 런던금속거래소(LME); Korea PDS.

그림 12. 곡물가격 추이



주: 근월물 선물가격.
자료: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국제금융센터.

2) 2013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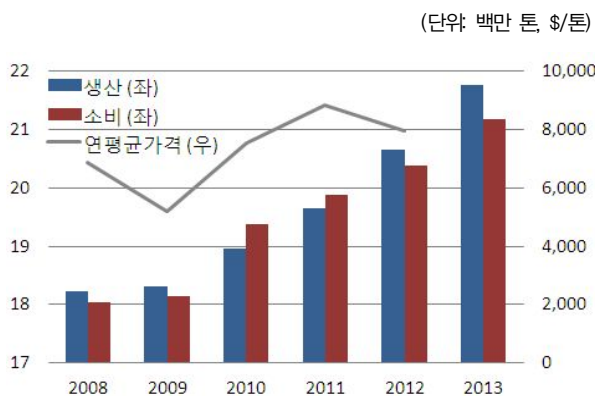
■ 비철금속 가격은 초과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하락할 전망

- 주요 소비국의 전기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소비국인 중국은 견고한 성장(2013년 8.3%)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공급량은 ASEAN 10개국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동연구그룹(ICSG)에 따르면 세계 전기동 초과공급량은 2012년 26만 톤에서 2013년 57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곡물가격은 향후 곡물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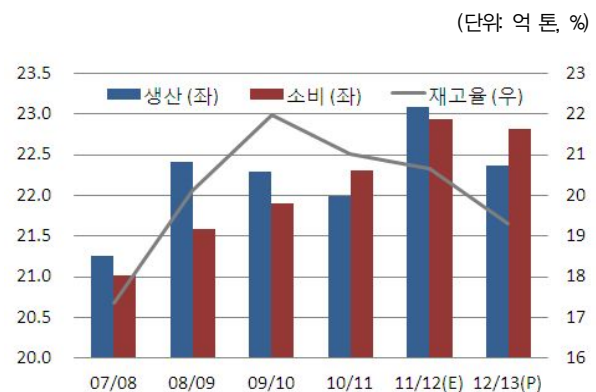
- 미 농무부(USDA)의 9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2/13년 전 세계 곡물생산은 22.36억 톤, 소비는 22.81억 톤으로 전망돼 앞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품목별 생산량은 소맥 -5.2%, 옥수수 -3.1%, 쌀 -0.2%로 각각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수출제한 가능성도 있어 향후 곡물가격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여름 세계 최대 곡물수출국인 미국이 1956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작황 상태도 1989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 곡물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곡물수출 제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곡물가격이 급등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 곡물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곡물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그림 13. 세계 전기동 수급전망



주: 2012년 가격은 9월 말까지 자료임.
자료: Korea PDS.

그림 14. 세계 곡물 수급전망



자료: 미국 농무부(2012. 9),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4. 국제통상환경

가. 세계교역

1) 2012년 동향

■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인해 세계 상품교역 부진이 지속됨.

- 세계 상품교역 증가율은 2010년 약 14%를 기록하여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약 5%로 둔화되었고 2012년 1/4분기에는 더욱 둔화되는 양상임(수출 및 수입 각각 3.2%, 2.0% 증가).

■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선진국의 수입 둔화를 보임.

- 2011년 선진국의 상품수입 증가율은 2.9%에 그쳤고, 2012년 1/4분기에는 약 1.3%로 더욱 약화됨.
- 미국과 일본의 2012년 1/4분기 수입증가율이 각각 3.0%, 3.2%를 기록한 반면, EU 국가 대부분의 수입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 이로 인해 2011년 5.3%의 증가율을 기록한 개도국의 상품수출은 2012년 1/4분기 4.1% 증가하는 데 그침.

■ 개도국 수입 수요도 약화되는 양상

- 개도국의 상품 수입증가율은 2011년 8.3%였으나, 2012년 1/4분기 들어 2.5%로 둔화되고 있음.
- 2011년 선진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개도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4.6%를 기록하였으나, 이 역시 2012년 들어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2012년 1/4분기 증가율 1.7%).

그림 15. 분기별 세계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UN 무역개발협회의(UNCTAD).

■ 2012년 세계교역 증가율은 2011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선진국 가운데 특히 EU의 수입 수요약화는 2012년 세계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WTO(2012. 9)는 2012년 세계 상품교역 규모 증가율이 전년대비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표 7 참고).
- 2012년 수출은 선진국의 경우 1.5%, 개도국의 경우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선진국 0.4%, 개도국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MF(2012. 10) 역시 올해 세계교역(상품+서비스) 증가율이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2012년 우리나라의 교역은 2011년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2011년 19.0%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2년 1~9월 20일간 수출증가율은 -0.8%에 그친 상황임.

2) 2013년 전망

■ 2013년 세계교역은 기존 위험요인의 조속한 해결 여부에 좌우될 전망

- 2013년 세계교역은 EU 재정위기 해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 등 선진국 경제의 위험요인 해소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WTO 2012. 9).
- 아울러 중국의 국내 수요 확대여부 역시 세계교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표 7.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

전망기관		국가군	2010	2011	2012	2013
IMF, 2012.10 (상품+서비스)	전 세계		12.6	5.8	3.2	4.5
	선진국	수출	12.0	5.3	2.2	3.6
		수입	11.4	4.4	1.7	3.3
	개도국	수출	13.7	6.5	4.0	5.7
		수입	14.9	8.8	7.0	6.6
	WTO, 2012.9 (상품)	전 세계		13.9	5.0	2.5
선진국		수출	13.0	4.6	1.5	3.3
		수입	11.0	2.9	0.4	3.4
개도국		수출	15.3	5.3	3.5	5.7
		수입	18.3	8.3	5.4	6.1

(단위: %)

■ 2013년 세계교역 증가율은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

- IMF는 2013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가율을 4.5%로 전망하고 있으며(2012. 10), WTO(2012. 9)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세계 상품 교역증가율을 4.5%로 예상함(표 7 참고).
- 이러한 전망치는 2012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3~07년 연평균 세계교역 증가율 8%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리나라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중국, EU,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바, 2013년 수출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중국(24.2%), EU(10.1%), 미국(10.2%)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음(2011년 기준).

나. 통상환경 전망

■ 각국은 FTA 체결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전망

-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 협상 또는 경제블록 추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소외될 경우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한 국가들이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2012년 9월 현재 발효 중인 FTA는 197건).¹⁾
- 특히 WTO DDA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은 FTA 체결에 더욱 적극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FTA를 통한 수출입 비중은 각각 26.6%와 15.8%, 일본은 각각 18.9%와 17.9%이며, NAFTA와의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각각 41.4%와 30.4%임(2011년 기준).
 - 2011년 교역액 기준 한국과 FTA 발효국의 교역 비중은 수출 26.4%, 수입 23.0%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보호주의 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2011년 10월부터~2012년 5월까지 182건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이전 6개월간에 비해 27건이 증가한 수치임(WTO 2012. 6).
 - 이 가운데 G-20 국가의 조치 건수가 124건으로 68%를 차지하는바, 세계경제의 핵심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되는 추세로 미국의 지재권 침해(section 337) 조사는 1999년 9건에서 2011년 69건으로 급증함(USITC).
-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제한조치는 2011년 15건에서 2012년 7월까지 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1~7월 기간 20개국에서 총 122건(규제 중 95건, 조사 중 27건)의 수입규제를 조치 중임.

1) 주요국의 최근 FTA 추진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혜윤(2012),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표 8. 최근 무역제한조치 동향

(단위: 건수)

유형	2010년 10월 중순 ~ 2011년 4월 중순(6개월)	2011년 5월 중순 ~ 2011년 10월중순(6개월)	2011년 10월 중순 ~ 2012년 5월 중순(7개월)
무역구제	66(53)	63(44)	78(66)
국경조치	78(52)	48(36)	72(39)
수출규제	30(11)	34(19)	19(11)
기타	10(6)	10(9)	13(8)
합계	184(122)	155(108)	18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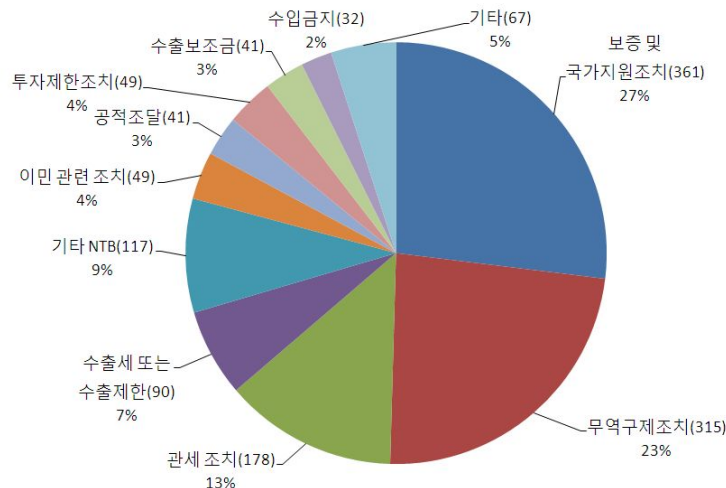
주: () 안은 G-20 국가들이 도입한 무역제한조치 건수임.
자료: WTO(2012. 6), *Report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산업정책 측면의 보호주의 조치가 확산됨.

-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최근 도입되는 무역제한조치가 위기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자국 산업보호를 통해 해당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장기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²⁾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이후 도입된 보호주의 조치 가운데, 보증 및 국가지원조치가 27%(36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Global Trade Alert 2012. 6).

그림 1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보호주의조치의 유형별 비중(2008. 11~2012. 5)

(단위: 건수, %)



주: 본 자료는 집계 범위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앞의 WTO(2012. 6)의 수치와 다름.
자료: Global Trade Alert(2012. 6).

2) WTO Press Release(2012. 6. 7), "Rise in trade restrictions now 'alarming', Lamy tells WTO ambassadors."

참고 1. 주요국의 보호주의적 국내 산업정책 사례

- 미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을 승인(2010. 8. 11일)하였는데, 주 내용은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감축 또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관세부과임.
- EU는 2012년부터 외국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권 매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반발을 야기함.³⁾
- 일본은 식품, 화학·의료 제품 관련 규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09년 화학물질 심사제조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규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환경보호 등의 명분을 들어 생산, 유통,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수출 쿼터 축소 등)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이나 포장, 라벨링, 안전규정 등에서 중국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 브라질은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한해 공업제품세(IFI, 부가가치세의 일종)를 30%포인트 인상하고 적용기간을 2012년 말에서 2017년까지로 연장함.
- 러시아는 자동차 사용세(utilization fee)를 도입하여 안전한 폐기 및 재활용을 약속하는 국내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반면, 외국산 자동차에는 관세 적용 시 세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되도록 함.
- 인도네시아는 신선농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광물자원 수출을 규제함.

3) 자세한 내용은 김종덕·김정권(2012),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II. 2013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과 전망

가. 재정절벽⁴⁾ 주요 내용과 경과

■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2013년 미국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위험이 있음.

- 재정절벽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크게 감세종료와 재정지출 축소로 나뉘는데, 이에 따른 2013년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총 5,600억 달러(명목 GDP 3.5%)로 추정됨(표 9 참고).
- 세부적으로 부시 감세안 종료(2,250억 달러), 급여세 인하조치 종료(850억 달러) 등의 감세와 실업수당 축소(340억 달러),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정지출 자동삭감(1,093억 달러) 등의 재정지출 축소로 요약됨.
- 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0.5%까지 하락하고,⁵⁾ 실업률은 8.2%(2012년 4/4분기)에서 9.1%(2013년 4/4분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9. 2013년 예정된 주요 재정관련 감축조치 및 규모

주요 항목		주요 내용	금액
감세종료	부시 감세안 연장 종료	- 2010년 통과된 실업보험 관한 재부여 및 고용촉진법(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에 따른 세금 감면 조치가 2012년 12월 말에 종료됨 - 2001년과 2003년에 도입되어 2010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됨	2,250억 달러
	급여세 인하 조치 종료	- 2010년 경기부양조치로 인한 급여세 인하조치(2%포인트)가 2012년 12월 말에 종료됨(근로소득자는 4.2% → 6.2%, 자영업자는 10.4% → 12.4%로 복귀)	850억 달러
재정지출 축소	실업수당 축소	- 중산층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안(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에 따른 긴급실업수당(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이 2012년 12월 말에 종료	340억 달러
	메디케어 의사급여 삭감	- 메디케어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 대한 지급률 인하	100억 달러
	재정지출 자동 삭감	-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따른 임의적 지출과 의 무적 지출 삭감조치 시행	1,093억 달러
기타			967억 달러
총계			5,600억 달러

주: 2013년 재정지출 자동삭감 규모는 총 1,093억 달러(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에서 각각 547억 달러)이며, 2013~21년 총 1.2조 달러(예산감축 984억 달러, 이자 감소 216억 달러) 삭감 예정.

자료: 의회예산국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세혜택 종료는 물론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지칭함.

5) 2012년 5월 의회예산국은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 2013년 상반기에는 연 -1.3%, 하반기 연 2.3%로 연간 0.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8월에는 연간으로도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된다고 경고함.

참고 2.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과 재정 감축 시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 미국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규모로 급증
 -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8년 6,418억 달러(GDP 대비 -4.5%)에서 2009년 1조 5,497억 달러(-11.1%)로 급증한 데 이어,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조 3,705억 달러(-9.5%), 1조 3,668억 달러(-9.1%)를 기록함.
 - 정부채무 규모가 법정한도에 근접하자(2011년 5월), 의회는 정부채무한도를 인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화방안을 포함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을 의결함(2011년 8월).
 - 이 법안에 따라 정부법정채무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시 감세 종료(2012년 말)는 물론 2013~22년 재정지출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기로 함.
 - 양 당은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를 구성, 2013~21년까지 재정적자를 1.2조~1.5조 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함.

- 합의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시 행정부 당시 취한 고소득층 감세조치에 대한 양당의 견해 차이임
 - 공화당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데 고소득층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의료혜택 축소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감세연장과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임.

-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정부채무위기 해소와 경기회복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함.
 - S&P가 정부채무 누적을 이유로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데 이어 최근 무디스도 2012년 9월 국가채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의 연방정부 채무는 2012년 10월 5일 현재 16조 1,505억 달러로 법정 상한선인 16조 3,940억 달러에 근접해 있으며, 2012년 말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 미 연방정부 채무 잔액 및 한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채무	8,420 (63.4)	8,921 (64.6)	9,960 (75.4)	11,853 (86.2)	13,511 (94.3)	14,746 (98.5)	16,334	17,532
정부법정 채무한도	8,965	9,815	11,315	12,394	14,294	15,194	16,3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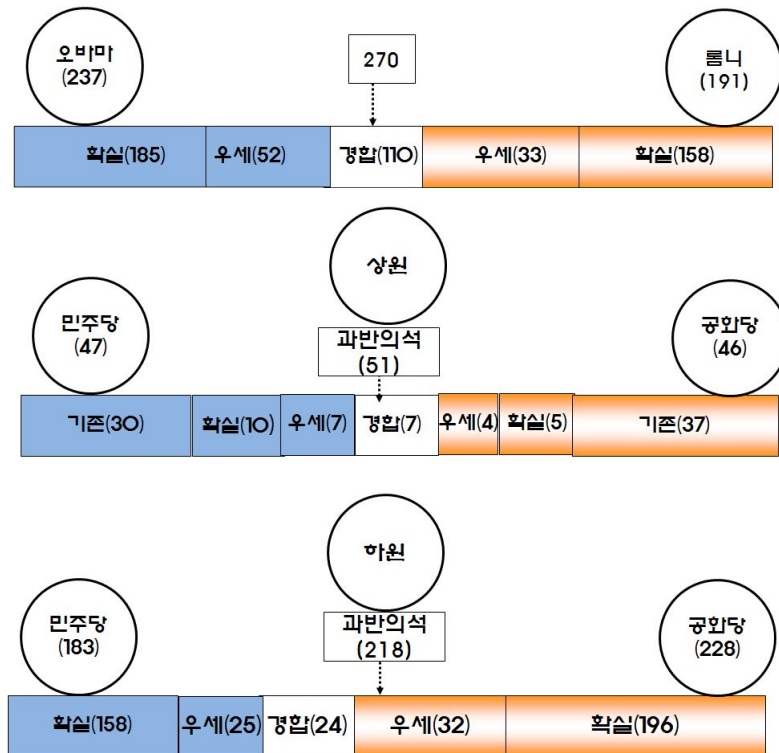
주: () 안은 GDP 대비이며, 2012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긴축이 필요하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절벽을 회피해야 하는 상충된 상황에 직면함.
- 재정절벽을 회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재정적자 문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 반면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

나. 정치적 합의 가능성 전망

- 2012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후보 가운데 오바마 후보가 근소한 우위에 있으나, 의회는 공화당이 우세함.
- 올해 11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공화당 후보에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의회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하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7. 미국 대선 및 의회선거 여론조사 결과



주: 대통령선거인단은 538명임. 의회선거는 상원 100석 중 33석만을 교체하고, 하원은 435석 전원을 대상으로 함.

자료: 『New York Times』 (2012년 10월 12일 기준)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 선거 이후 행정부와 의회 구성에 따라 가능한 네 가지 시나리오

- (I) 현재와 동일한 상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
 -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급격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감세조치와 실업수당 축소에 대해 대선 이후 우선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양당 간 재정긴축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재정지출 자동삭감 같은 중기적이고 포괄적인 세부 일정과 내용은 차기 행정부와 의회로 넘겨져 정치적 협상력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즉 급여세 감면 등 감세항목과 실업수당 축소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부터 올해 연말 사이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으나 국방비를 포함한 재정지출의 자동삭감은 피할 수 없음.
- (II)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경우로 의회의 견제가 가장 심한 상황임.
 - 공화당이 고소득층을 포함한 세금감면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반면,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으로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견제가 가능하므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재정긴축조치 시행 및 연방정부 채무한도 확대를 두고 행정부와 의회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음.
- (III) 롬니의 당선으로 공화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상황
 -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민주당의 제한된 견제로 대폭적인 사회보장지출 감소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재정적자 축소 방향으로 선회
- (IV) 롬니 당선으로 공화당이 행정부는 물론 의회를 완전 장악하는 상황
 - 고소득층을 포함한 세금감면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반면,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시행함.

표 11. 미국의 2012년 대선 이후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 시나리오

시나리오	행정부	의회다수당		정책방향
		상원	하원	
I	오바마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급여세 인하조치와 실업보험 연장이 올 연말까지 처리되어 급격한 재정 절벽은 피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방비를 포함한 자동세출 삭감은 피할 수 없음.
II		공화당		공화당은 세금감면조치(고소득층 포함)의 영구적인 시행과 사회보장지출 대폭 삭감 등 가장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재정긴축조치 시행 및 국가 채무한도 확대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음.
III	롬니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민주당의 제한된 견제로 사회보장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은 어려우나, 전반적인 재정적자 축소방향으로 선회
IV		공화당		세금감면조치(고소득층 포함)들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반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으로 가장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시행함.

■ 재정절벽과 관련된 세부항목 조율은 11월 대선과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재정정책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현격하지만, 재정절벽으로 예상되는 충격이 매우 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타협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의석구도 때문에 대선 이후 레임덕 회기(2012년 11~12월) 동안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실정임.
- 우선적인 협의사항은 (1) 급여세 인하조치 연장 및 비상실업수당 조치 연장이며, 이후 (2) 연방정부 법정채무한도 증액 (3) 부시 감세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4) 2011년 예산통제법으로 인한 자동재정지출 감축조정 등의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양당 모두 재정적자 감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절벽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어, 급여세 인하조치와 긴급실업수당(emergency unemployment benefit) 연장 등 임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것임.
- 부시 감세안 연장은 현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이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 ※ 감세조치 종료 시 소득구간별 한계세율은 각각 10% → 15%, 15% → 동일, 25% → 28%, 28% → 31%, 33% → 36%, 35% → 39.6%로 조정됨.
- 2011년 연방정부 법정채무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부채무가 2012년 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재정건전화 협상의 복잡성과 민감성, 그리고 현재의 정치구도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많은 부분에서 양당 간 참여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12. 재정긴축에 대한 미국 양당 간 견해 비교

주요 항목		오바마 대선후보/민주당	롬니 대선후보/공화당
감세	① 부시감세안 연장종료	- 고소득층 가구에 대한 감세는 종료하고, 그 이하 가구의 감세조치 연장 - 고소득층 감세종료로 인한 4조 달러의 세수증가분을 교육,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	- 소득수준 구분 없이 모든 가구의 감세조치 연장 - 고소득층 감세 종료 시 소기업 등의 세 부담 증가로 일자리 감소
	② 급여세 인하 조치 종료	- 양당 모두 급여세 인하조치 연장에 기본적으로 찬성	
재정 지출 축소	③ 긴급실업수당 지급 종료	-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찬성 - 공화당 대다수는 연장에 찬성하지만, 일부는 근로의욕 저하를 이유로 종료를 주장. 다만 실업수당 지급기간 단축 입장	
	④ 재정지출 자동 삭감	-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에서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감축은 수용 불가 -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통제법의 합의 수정시도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	- 예산통제법에 따른 강제적 지출삭감 규모 이상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되, 국방비 삭감비중은 축소하지는 입장

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KIEP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긴축 조치 중 위의 ① 부시 감세안, ② 급여세 인하조치 등 감세조치가 합의되어 긴축규모가 축소되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기준 전망).

- 하지만 감세조치가 합의되지 않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성장률이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2.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저성장과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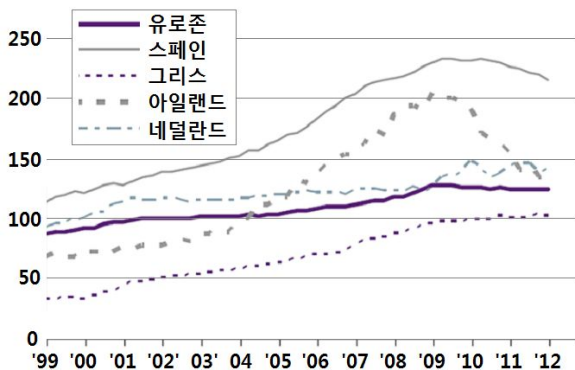
가. 디레버리징의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남유럽을 중심으로 부채감소(디레버리징)가 진행 중임.

- 유로화 도입 이후 남유럽을 중심으로 유입된 저리자금은 부동산 거품을 불러왔으며, 자산가치 증가가 소비(부의 효과)와 신규 대출(투자)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패턴을 지속시켰음.
- 풍부해진 저리자금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비·투자주도형 성장모델을 확산시켰으며, 이들 국가 내 임금 및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산업경쟁력 약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대외채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
-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간채무의 위기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스페인의 경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채무를 떠안아 발생한 것임.

그림 18. 유로존의 민간채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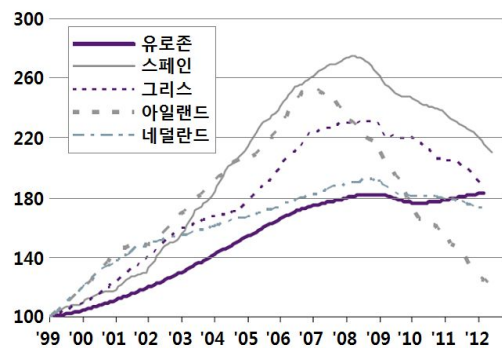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Datastream; Natxis.

그림 19. 유로존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

(단위: 1999년 1/4분기=100)



자료: Datastream; Natxis.

■ 유로존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① 민간채무 감소, ② 고용회복, ③ 재정건전화, ④ 대외채무의 축소(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당분간 남유럽 국가들은 저성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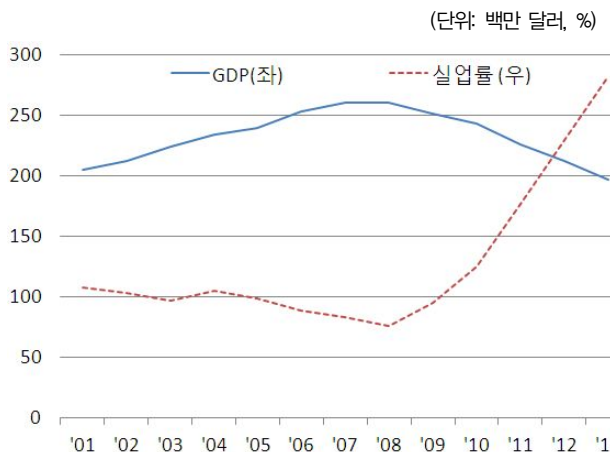
- 현 상황을 호황기 때 거품이 붕괴된 후 나타나는 일련의 재조정 과정으로 파악할 경우, ECB가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실물경제 회복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1990년대 ‘일본형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위기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는 장기적인 소비·투자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

나. 재정위기 국가별 전망

■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채무조정 등 유로존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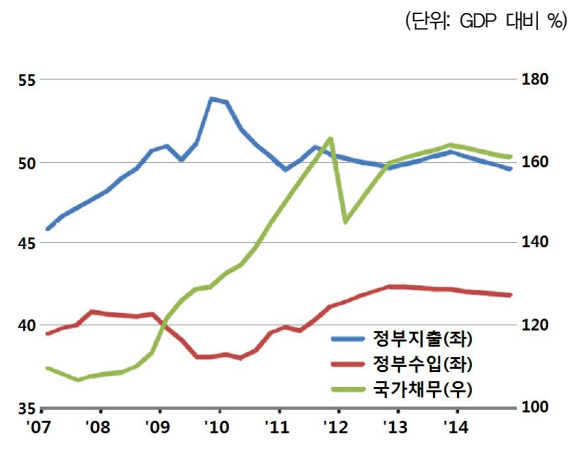
- 구제금융 조건에 따른 긴축으로 그리스 경제는 2008~12년 기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GDP가 2008년의 80%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현 연립정부는 유로존 잔류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나 소비·투자 침체, 높은 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근시일 내에 경기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금융권도 ECB의 긴급자금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환율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금조정을 통한 평가절하가 진행 중이나, 아직 산업생산 및 수출,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임.

그림 20. 그리스의 GDP 및 실업률 변화추이



자료: Global Insight,

그림 21. 그리스의 정부지출 및 수입, 국가채무 추이



자료: EU 집행위원회(2012. 3).

- 그리스 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 중이나 극심한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세수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긴축시한 연장 또는 추가 구제금융, 채무조정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① 긴축시한 연장, ② 3차 구제금융, ③ 채무탕감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 대안과 동력이 없다는 점, 긴축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사건을 촉발제(trigger)로 하여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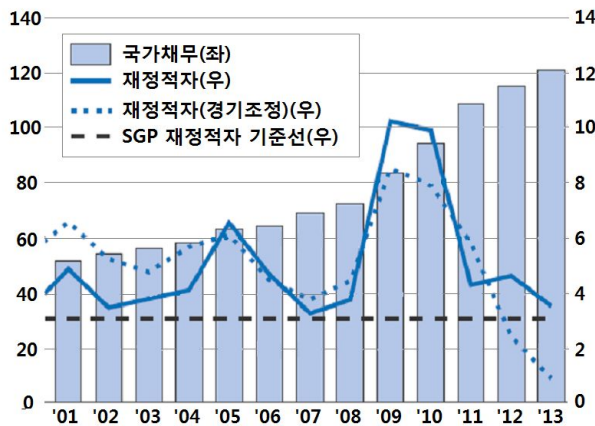
■ (포르투갈) 재정적자 감소에는 성공하고 있으나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추가 구제금융 신청이 예상됨.

- 고강도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감소에는 성공하였으나, 2012년(-3.3%)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재정적자 감축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등의 경제지표는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침체 폭이 크며, 실업률은 스페인,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포르투갈은 2012년에만 93.4억 유로(GDP 대비 5.6%)의 건축조치를 추진함.
- 포르투갈 연립정부와 야당인 사회당은 건축프로그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그리스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는 적으나 건축으로 인한 성장저해효과가 재정수입 악화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구제금융(2011년 4월)은 2013년 9월부터 포르투갈의 부분적인 자체 국채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국채금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차 구제금융 또는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하반기 국채금리(10년 만기)는 유로존 국채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로 하향추세이나 유로존 내 신용 이벤트 발생 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2. 포르투갈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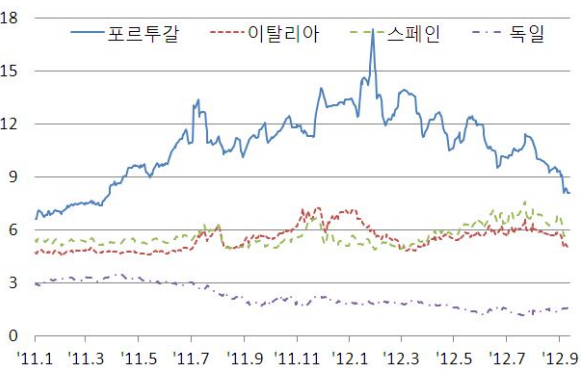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2012, 2013년은 전망치임.
자료: OECD, 2012 Economic Review - Portugal.

그림 23. 포르투갈의 국채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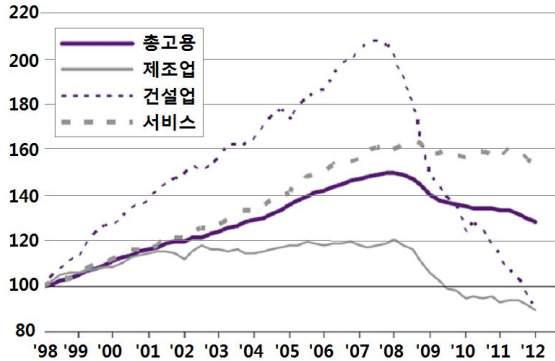
주: 10년 만기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 (스페인) 고강도의 건축과 고실업, 건설경기 침체로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스페인의 실업률은 EU 최대수준(2012년 7월 24%)이며, 부실대출도 급증하여 대규모 부채축소(디레버리징)에 직면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채무를 떠안은 채무위기의 전형으로 해결과정에서 대규모 디레버리징과 이에 따른 소비·투자 침체가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은 향후 20%가량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추가적인 금융권 부실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4. 스페인의 부문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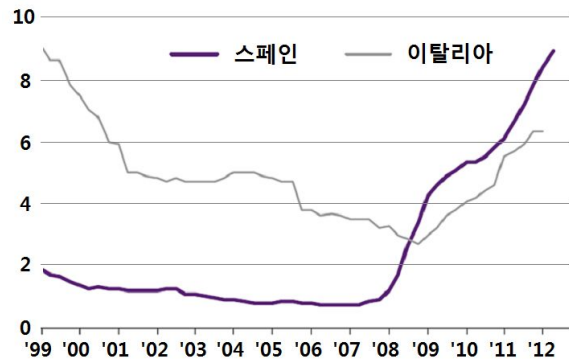
(단위: 1998년 1/4분기=100)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Natxis.

그림 25.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실채권 비중

(단위: 전체 대비 %)



자료: Datastream; Natxis.

- 금융권 부실화, 건설부문의 반등여부, 건축시점에 대한 조정 등에 따라 스페인의 경기침체 심화 및 회복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바, 경기침체 악화 시 재정건전화에 실패하여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큼.
- o 스페인의 재정위기 심화여부는 ① 부동산 가격 추가하락(→부실대출 증가), ② 추가적인 경기침체, ③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여부에 달려 있음.

다. 성장 vs. 건축의 양립방안 모색

■ 2012년 범유럽적 건축조치는 유로존이 추진·시행 중인 재정개혁을 반영

-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은 2013년까지 성장·안정협약(SGP)의 재정적자 기준(GDP 대비 3%)을 충족하겠다는 계획으로 2012~13년에도 건축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o 유로존 회원국이 제시하는 중기재정안정 보고서(Stability programme)에 따르면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2012년까지 SGP의 재정적자 기준(GDP 대비 3%)을 충족하는 것이 목표임.
- o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도 2013년까지 3% 기준을 달성하고자 노력 중으로, 2013년 이후 SGP의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는 구제금융을 받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불과할 전망이다.
- 그러나 현재의 재정건전화는 호경기 때의 세수증가가 아닌 불경기 때의 세출축소에 의한 것으로 성장저해효과가 클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재정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o 건축 → 경기침체 심화 → 세수 감소, 국채금리 상승 → 재정수지 악화

■ 성장촉진 조치와 중기재정목표를 적절하게 조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독일은 재정위기가 ① 일부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②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초기부터 재정건전화를 주장해 왔으나, 2012년부터 남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음.

- 독일정부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준칙 확립(긴축) → 구조조정 단행 → 재정통합 조치의 점진적인 도입 을 해법으로 제시해 왔으나 긴축의 한계에 봉착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독일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함.
- 신뢰상실로 인한 재정위기 악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유로존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① 경기를 감안하여 일부 국가의 긴축시점을 늦추거나, ② 유로존(EU) 차원의 성장프로그램 강화일 것으로 예상됨.
- 긴축시한 연장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우선적으로 독일 등 북유럽 국가의 반대가 예상되나, 재정위기국이 자구 의지를 보일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별화된 긴축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EU 차원의 성장프로그램 강화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통화정책을 통한 ECB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ECB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EFSF/ESM의 재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구제기금 규모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를 증폭하고 있으므로 발권력을 갖춘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ECB 개입 주장의 근거임.
- 그러나 ECB가 유동성 공급의 범위를 넘어서 국채매입을 대폭 확대하거나 구제기금의 레버리지 지원에 나설 경우, 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②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우려도 제기됨(특히 독일의 반대).
-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저리유동성 공급, 국채매입 확대 등 시장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9월 드라기 총재는 3년 미만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개입의지를 밝힌 바 있음.
※ 국채매입조치는 불태환조치와 재정위기국의 구제금융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는 통화정책 운영 원칙(물가안정)과 독일의 입장(물가안정+도덕적 해이 방지)이 반영된 것임.
- 다만 현재 민간부문의 부채축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은 소비·투자 촉진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국채매입도 측면 지원 조치에 불과하므로 재정위기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별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라. 재정통합의 점진적 진전

■ (은행동맹) 금융기관을 통한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비교적 빠르게(2013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 은행동맹(banking union)은 ① EU 차원의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 ② 공동예금보험제도 및 ③ 은행 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며, 현재 ECB에 단일은행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은행동맹 설립이 제기된 이유는 ① 시중은행의 영업활동(유럽 전역)과 은행 감독권 및 책임(개별 국가) 간의 괴리, ② 재정위기가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매개로 확산되면서 은행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임.
- 은행동맹 형성은 재정동맹으로 가는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데, 유로존 차원의 은행감독기구와 보증기구를 설립할 경우, EU 공동재원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은행동맹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회원국 간 입장차가 있어 협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6,000여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ECB에 부여하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나 독일은 이들 대형은행에만 국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비유로존 회원국은 통합감독이 유로존 내에 국한될 것을 주장함.
- EU 차원의 공동예금보험제도와 은행 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소요액과 각국의 분담비율 등을 정해야 하므로 도입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로본드)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지향점이 될 전망이다.

- 많은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존속하는 가운데 재정위기를 완화하고 대외적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왔으며, 유로본드는 재정통합의 대표적인 형태임
- 구제금융 또는 유동성 공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취약국가로 전이되는 이유는 시장이 유로존을 단일경제권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 대안으로 유로본드 도입이 제안됨.
- 그러나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매우 강한데, 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② 현재의 EU 조약과 불합치하다는 점임.
-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유로본드 도입에 우호적인 반면, 독일은 재정위기 발생 초기부터 채무공동화를 통한 위기해결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
- 독일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독일에 추가 재정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 메르켈 총리: “내가 살아 있는 한 유로존 국가들이 채무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일(유로본드의 발행)은 없을 것” (6/26)
 - ※ 야당을 포함한 독일의 5대 정당은 모두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현 시점에서 도입 추진 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됨.
- 현 시점에서 유로본드의 전격적인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나, 두 가지 전개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음.
 - 첫째, 재정위기가 심화(스페인, 이탈리아로 위기 확산)될 경우 유로존 차원의 재원 마련에 독일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준칙이 확립되고 재정건전화가 회복된 시점에서는 재정통합 논의가 순조로워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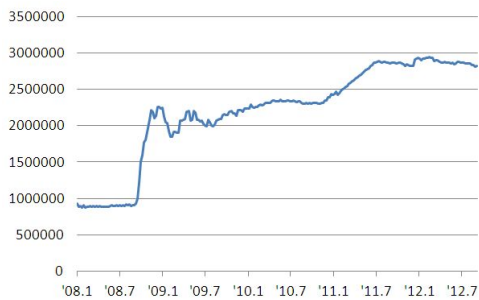
3.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영향

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함.
-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적인 제로(0) 수준의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Nontraditional Monetary Policies)의 하나인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 2012년 10월 현재 미국 0~0.25%, 유로지역 0.75%, 일본 0.1%, 영국 0.5%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이자율 하락을 통한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임.
-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로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2008년 초에 대비하여 2012년 9월 현재 미 연방준비은행(FRB)의 자산은 205%, ECB의 자산은 139%, 영국 영란은행(BOE)의 자산은 330%, 일본은행(BOJ)의 자산은 40% 증가하였음(그림 26~29 참고).

그림 26. FRB의 총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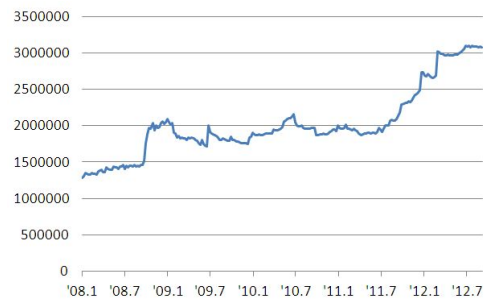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그림 27. ECB의 총자산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그림 28. 영란은행의 총자산 규모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영란은행(BOE).

그림 29. 일본은행의 총자산 규모

(단위: 백만 엔)



자료: 일본은행(BOJ).

■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양적완화의 규모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함.

- 미국 연준(FRB)은 2012년 9월 13일 무기한으로 매월 4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양적완화(QE3: Quantitative Easing 3) 정책을 발표하였음.
 - QE1은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최대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매입, 2천억 달러 규모의 공공기관채 매입을 내용으로 함.
 - QE2는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내용으로 함.
- 영국 영란은행(BOE)은 2012년 7월 50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규모는 총 3,750억 파운드에 달함.
 - 2009년 3월 2,000억 파운드 규모의 양적완화 발표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 750억 파운드, 2012년 2월 500억 파운드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일본은행(BOJ)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동담보대출 제도와 자산매입기금을 조성하여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음.
 - 자산매입기금은 국채, 회사채, 상업어음, 상장지수펀드 등을 매입하는 자산매입과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행은 2013년 12월까지 자산매입 55조 엔, 신용대출 25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할 계획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양적완화 규모는 총 525조 엔에 달함.
- ECB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을 통해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음.
 - ECB는 LTRO를 통해 만기 3년 금리 1%의 조건으로 금융권에 총 1조 187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음.
 - 1차 LTRO(2011. 12. 21)는 523개 은행에 4,892억 유로, 2차 LTRO(2012. 2. 29)는 800개 은행에 5,295억 유로를 공급함.

■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에 효과적임.

- 양적완화 정책은 시장금리 하락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국의 QE1과 유로지역의 LTRO 프로그램은 금융권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위기 확대를 막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피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0.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단위: %)



주: 검은 선은 양적완화 시행 시점.
자료: Bloomberg.

그림 31. 유로 지역 10년 만기 국채금리

(단위: %)



주: 검은 선은 양적완화 시행 시점.
자료: Bloomberg.

그림 32. 영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단위: %)



주: 검은 선은 양적완화 시행 시점.
자료: Bloomberg.

그림 33.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

(단위: %)



주: 검은 선은 양적완화 시행 시점.
자료: Bloomberg.

■ 양적완화의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물가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장기금리 등 시장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는 양적완화로 인한 추가적인 금리하락이 어렵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적어질 수 있음.
- [표 13]은 미국 1~3차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인데, 양적완화가 거듭될수록 미국 10년 만기 국채와 MBS 금리 하락폭이 작아지고 있음.
- 현재 주요국은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출구전략 시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영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이지만, 2010년 이래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2011년 한때 5% 이상의 고물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표 13.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장기국채와 MBS 금리에 미친 영향

(단위: bp)

구분	10년 만기 국채 금리	MBS 금리
QE1	-128.60	-136.00
QE2	-42.93	-37.25
QE3(2012년 9월 현재)	-8.00	-32.30

자료: 이동은(2012),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제 3차 양적완화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1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

■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로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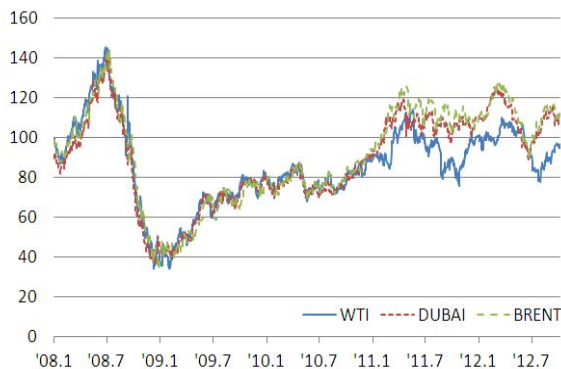
- 주요국이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빠른 속도의 유동성 팽창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일부 신흥국과 상품시장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고 있음.

■ 국제 상품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

-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투자 대상이던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 투자수단으로서 상품시장에 유동성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유가와 곡물가 등 국제 상품시장 가격불안 요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그림 34. 국제유가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35. 국제상품가격 지수(CRB)* 추이

(단위: 인덱스)



주: *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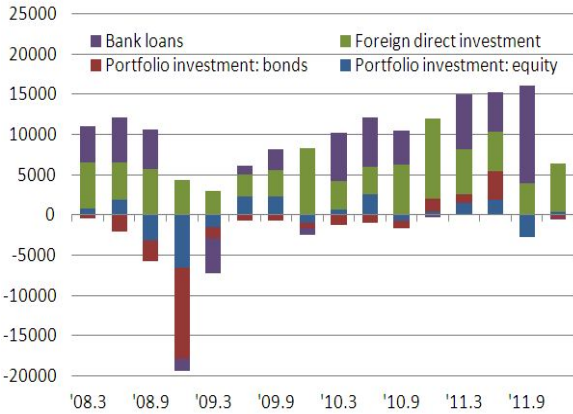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신흥시장 자본유입 증가와 환율 평가절상 압력에 대한 우려

-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주요 선진국의 금리하락과 통화가치 절하로 인해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증가해 외환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 투기성 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산시장 거품 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초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2009년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그림 36~37 참고).

그림 36. 한국의 자본유출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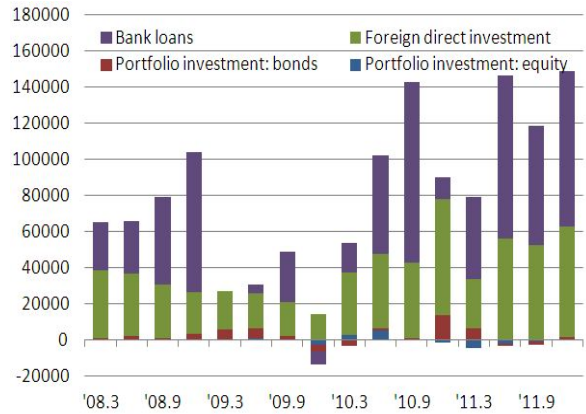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림 37. BRICs의 자본유출입 구성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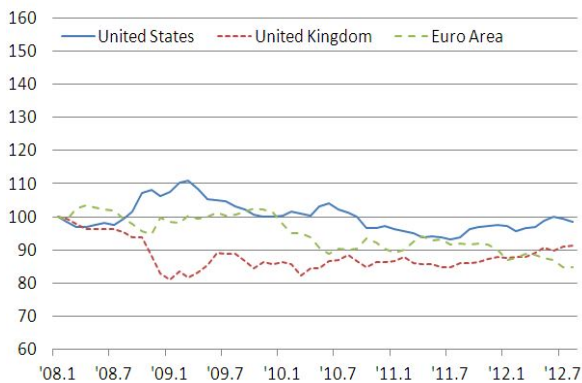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 영국, 유로지역의 통화 가치는 2008년 초 대비 절하되어 있음(그림 38~39 참고).
- 미국 달러화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절상되었다가 이후 절하되었음.
-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미국과 유로지역 등의 적극적인 양적완화로 인해 위기 이전에 비해 엔화는 절상되었음.
- 중국 위안화는 점진적인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라 절상 기조에 있으며, 최근 달러화 대비 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함.
- 한국 원화는 위기 초에 있었던 큰 폭의 절하로 인해 현재도 위기 이전보다는 절하된 상태이나 이후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38. 미국, 영국, 유로지역의 실질실효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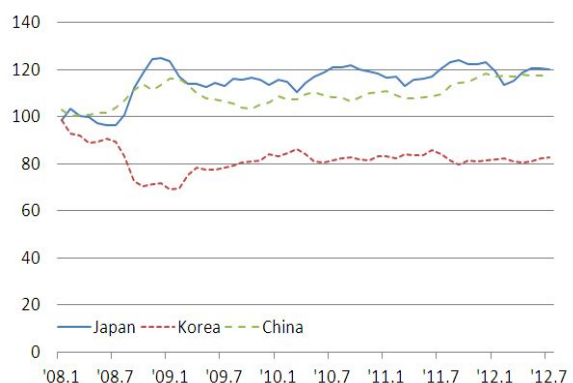
(단위: 2008년 1월=100)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39. 한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

(단위: 2008년 1월=100)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주요국의 양적완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음.
 -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는 현재의 양적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현재의 초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QE3의 종료 시점도 한정짓지 않았음.
 - 유로지역의 경우 LTRO의 만기가 3년이므로 현재의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
 -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이 유로지역의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과 영국 등의 실물경제 회복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함.
 - 양적완화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그 효과가 점차 작아질 가능성이 높음.
 - 양적완화의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시장의 실망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주요국은 과도한 국가채무로 재정정책의 여력이 소진되었고, 정책금리도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없으므로 시장의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일부 신흥국의 환율과 자산시장에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 상품시장 가격 불안정 요인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주요국 환율이 절하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원화가 절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신흥국 자산시장에 투기성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유가, 곡물가 등의 상품시장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4.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경제정책 방향

가. 중국의 권력 이양과 권력구조 개편 전망

■ 2012년 11월 8일 제18차 당대표대회를 거쳐 5세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될 예정임.

-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리커창이 총리에 오르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숫자가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선전부를 총괄하던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주임과 공안부·사법부를 총괄하던 '정법위원회' 서기가 상무위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그동안 계파별 안배에 따라 상무위원 숫자가 증가해 왔으나, 이것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의사결정에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됨.
-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숫자: (1982년) 5인 → (1992년) 7인 → (2002년) 9인 → (2012년) 7인
- 핵심권력 7명은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3대 계파 간의 안배를 거쳐 선출될 전망이며, 인맥과 지향점이 비슷한 태자당과 상하이방에서 4명, 공청단에서 3명의 지분을 나눠가질 공산이 큼.

표 14.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직책 변화 전망

현행	18차 당대회 개편 전망
(1) 당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1) 당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2) 전인대 위원장	(2) 전인대 위원장
(3) 국무원 총리(총괄)	(3) 국무원 총리(총괄)
(4) 정협 주석	(4) 정협 주석
(5)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주임(이념 담당)	(5) 국가부주석
(6) 국가부주석(+중앙서기국 수석서기+중앙당교교장)	(6) 국무원 부총리(경제 담당)
(7) 국무원 부총리(경제 담당)	(7) 규율감사위 서기
(8) 규율감사위 서기	
(9) 정법위원회 서기, 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 주임	

자료: 필자 작성.

■ 5세대 지도부의 공통적인 성향은 안정 지향성과 풍부한 지방 실무경험에서 오는 경제 감각임.

- 10대 후반에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직접 경험한 후 공산당원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안정적인 당의 집정(執政)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둠.
- 지방 근무를 통해 현지 경제 운용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서민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음.
- 단,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계파간·인물간 우선순위가 나뉘는 조짐이 있으나 집단 지도체제의 특성상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적음.
- 기업가를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여도록 黨章(당규약)을 수정한 장쩌민의 상하이방은 대체로 친기업, 성장 위주의 성향을 지님.

- 태자당이나 공청단은 이념적 성향을 규정하기 어려우나, 포용적 발전을 내세운 후진타오에서 보듯이 인민들의 직접적 복리를 우선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에 태자당과 상하이방이 연합한 사례나 최근 공청단 계파의 왕양(王洋) 광동성 서기가 선성장(先成長) 모델을 실천하는 등 계파에 따른 획일적 이념 규정은 다소 무리임.

나. 향후 경제정책 방향기조

- 12·5규획(2011~15년)에 나타난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 이 2015년까지의 경제정책 기조임.
- 12·5규획에서 제시된 목표 성장률은 7%로 11·5규획의 목표였던 7.5%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됨.
-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소득분배 확대, 도시화, 자원절약환경친화형 녹색성장 등을 중시함을 반영한 결과로서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균형성장 지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한편 기존의 경제계획에서 실제 성장률이 목표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할 때 목표 경제성장률 하향 설정이 곧 경기둔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12년 3월에 열린 전인대(6)에서 ‘안정 속의 발전(穩中求進 온중구진)’을 정책기조로 제시하고 2012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2011년보다 0.5%포인트 낮은 7.5%로 제시함.

표 15. 과거 5개년 발전계획의 연평균 목표와 실제 성장률 비교

	10·5규획 (2001~05년)	11·5규획 (2006~10년)	12·5규획 (2011~15년)
목표 성장률	7.0%	7.5%	7.0%
실제 성장률	9.5%	11.2%	-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 신(新)지도부의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은 2013년 가을 18기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신지도부의 정책 비전이 체계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임.
- 통상적으로 전체 당대회와 함께 1중전회와 2중전회가 열리며, 그 다음 해에 3중전회가 열림.
- 후진타오 정권 역시 2002년 가을에 선출된 후, 2003년 가을 제16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에서야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등 자신만의 이념을 명시적으로 밝혔음.

6) 전국인민대표회의를 뜻하며,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매년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보고로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중점업무에 대한 브리핑으로 이루어짐.

다. 대내 경제정책방향

■ (구조조정 가속화) 자원절약형, 친환경형 산업으로 구조조정, 산업고도화 달성

- 구조조정이 적절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2016년부터는 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고, 지도부가 임기를 마칠 2023년에는 5%대의 성장률로 접어들 전망임(World Bank & DRC 2012).
- 중장기적으로 과거 10년간 2~3% 수준의 저물가 구조에서 4% 내외 고물가 구조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됨.
- 잉여인력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 소비수요 증가, 통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절약형, 친환경 산업으로 산업고도화를 달성하려고 함.

표 16.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향후 GDP 성장률 전망

구분	1995~2010년	2011~15년	2016~20년	2021~25년	2026~30년
성장률(%)	9.9	8.6	7.0	5.9	5.0

자료: World Bank&DRC(2012. 2), China 2030.

■ (경제 구조조정) 내수확대, 서비스화, 도시화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

- (내수확대) 소비촉진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소비보조금 형태의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소비진작책을 통해 소비를 연평균 15% 증가시켜 2015년까지 전체 소비재 판매액 32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함.
-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GDP 비중을 2011년 43%에서 2015년 47%로 제고하려 함.
- 서비스업의 장려 업종 수를 112개로 늘리고 금융, 과학기술, 물류유통 등 현대 서비스업을 새로 포함시키며, 세부 업종별 서비스업 진흥정책을 실시할 예정임(2011. 5,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 (도시화) 도시화율을 2010년 47.5%에서 2015년 51.5%로 제고할 계획이나 2011년에 이미 51.3%에 도달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수치에는 2억 명 이상의 무(無)호적 농민공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주택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도시화 정책의 관건임.

■ (민생 개선) 고용보장, 소득증가, 주택보급, 사회보장을 통한 민생 개선 추진

- (고용보장) 5년간 도시 신규 취업 4,500만 개 창출(전환농업노동력 4,000만 명), 도시 등록 실업률 5%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도시지역에서 잉여 노동력이 1,300만 명 발생하고 있음.
- (소득증가) 최저 임금표준을 매년 13%(실질 평균 임금의 40%선 유지)로 인상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 가처분 소득을 매년 7% 증가시킴.

- (주택 보급)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민형 보장성 주택을 1,600만 호 건설할 계획임.
- (사회 보장) 도시 호적 보유 주민(3.57억 명)을 대상으로 한 양료보험 구축, 도농 3대 기본의료보험(城鄉三大基本醫療⁷⁾ 가입률을 3%포인트 제고시키고, 평균수명 1년 연장을 목표로 함.

■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

- (7대 전략산업) 12·5규획에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세 단계 전략 목표를 설정함.
 -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임.
 - 7대 전략산업의 GDP 내 비중: 3%(2010년) → 8%(2015년) → 15%(2020년) →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2030년)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포함되면서 21세기 전략산업인 '녹색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문화산업 육성) 중국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소프트 파워 제고

- 2012년 정부공작보고에서 '문화발전 촉진'이 9대 중점업무로 선정되고, 출판·영상·방송·문학·예술 등 사업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 소수민족 문화사업 발전이 구체적 추진 내용으로 제시됨.
- 문화를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패권경쟁 및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임.
 - 사회주의 가치체계 수립, 애국주의 사상 강조, 중화문화 함양, 문화 혁신 추진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현대문화 산업체계 구축, 현대 문화시장 육성, 문화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를 세 가지 중점 육성 분야로 설정함.

■ (세제개혁) 보편적 징수 위주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세제개혁 추진 확대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增值稅 증치세), 영업세 개혁을 통한 감세정책과 자원세 등 환경, 자원에 대한 증세정책을 병행하고, 장차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및 세정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것으로 전망됨.
 - 상하이에서 실시된 부가가치세 시범개혁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2013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부동산세 도입은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시범지역인 충칭, 상하이로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임.

7) 도농 삼대 기본의료보험은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신흥농촌합작의료를 말하며, 2010년 기준 도농 삼대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2억 6천만 명임.

라. 대외 경제정책방향

- (전략기조) 12·5규획의 대외경제전략기조를 ‘세계경제 거버넌스와 지역협력에의 적극적 참여’ 로 명시
 - ‘세계경제 거버넌스’ 언급은 IMF와 세계은행 등 선진국 주도 국제경제체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임.
 - ‘지역협력’은 개도국 및 주변국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다양한 다자간 협의기구를 추진
 - ASEAN+3, 한·중·일 정상회담, 상하이협력기구, 중국-아랍경제무역포럼, 중국-아프리카 포럼 등

- (무역정책) FTA를 통한 경제적 연계 강화와 수입확대, 내수촉진정책으로 경상수지 균형 촉진
 - 12·5규획에서 ‘FTA 전략을 서둘러 구현하고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한다고 명시함.
 - 현재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9개국,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8개국, FTA를 연구 중인 국가는 2개국임.
 - 중국의 FTA 추진 목적은 1) 개방개혁, 외자도입, 해외진출 등을 통한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2) 역내 영향력 확립.

- (투자정책) 선별적 외국인투자(FDI)를 통한 산업재편과 고도화 유도 및 해외투자(ODI) 장려
 - 적극적 외자유치정책에서 외자기업의 특혜를 줄이고 외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차세대 인터넷시스템 설비 개발·제조 등을 ‘장려업종’에 추가함.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더불어 자원 확보,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해외투자가 급증
 - 저개발국에 도로·철도 등 사회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광물자원을 받는 ‘앙골라 방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기술과 브랜드 획득을 위해 경영난에 봉착한 선진국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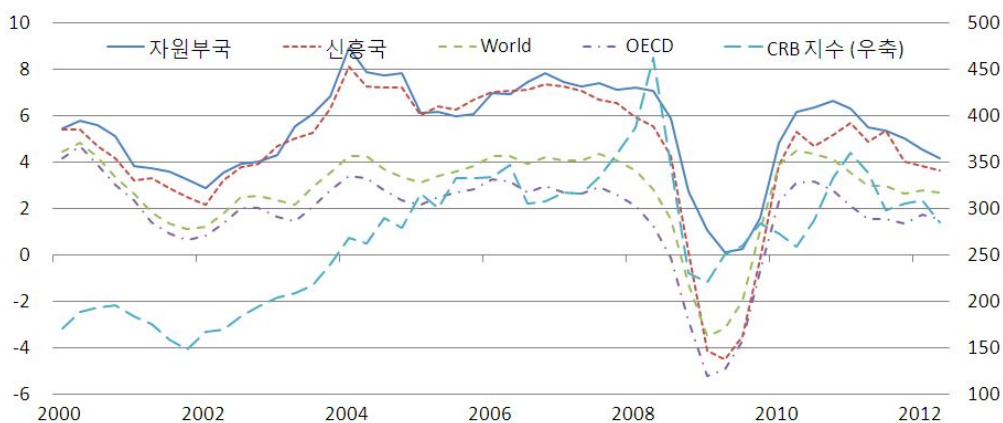
- (금융, 통화정책) 향후 중국 국제통화체계 개혁을 도모하고, 위안화 국제화와 태환성 확대를 추진
 - 역내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자국통화를 이용한 스왑 협정을 맺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개방 초기) 환율 관리와 자금유출입 통제 → (1990년대) 단일환율제와 경상수지 완전태환허용 → (2008년 이후) 위안화 국제화와 태환성 확대

5. 글로벌 저성장하의 자원부국 경제

가. 세계경제 변화와 자원부국의 경제성장

- 2003년 이후 주요 신흥지역 자원부국(resource-rich countries)의 성장률은 신흥국의 성장률을 상회함(그림 40 참고).
- 신흥국은 2003년 이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선진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고,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경제권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에도 신흥지역의 자원부국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함.⁸⁾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성장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신흥 경제권의 상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부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
 - 에너지나 광물자원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은 자원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자원 수출을 통한 수입(revenue)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이로 인해 거시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움.⁹⁾
- 자원부국의 경제성장은 2010년 6%를 상회하였으나 주요 경제권의 성장과 자원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011년 이후 성장률 감소가 지속돼 2012년 들어 4%대로 하락함.

그림 40. 주요 경제권의 국내총생산(GDP) 및 상품가격지수 추이



주: 2000년 이후 분기별 실질성장률.
자료: Bloomberg; Global Insight.

8) 여기서는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세계 생산량과 각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20개국을 자원부국으로 선정하였고, 신흥국은 IMF(*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2)에서 Emerging economies로 분류하고 있는 25개국을 인용하여 비교함.
9) Arezkei, R. and Nabli, M.(2012), "Natural resources, Volatility, and Inclusive Growth: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MF Working Paper WP/12/111.

■ 자원부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기에 따른 자원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가격을 대표하는 Reuters Jefferies CRB 지수는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변동성이 커져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중됨.
- FRB의 3차 양적완화 이후 달러화 약세, 상품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 가능성과 주요 경제 권의 경제회복 지연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임.

나. 지역별 자원부국과 경제 부문별 동향

■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자원부국은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중동, 북부 아프리카 지역 자원부국은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높으며, 일부 국가의 수출 비중은 재화수출의 90%를 상회함(표 17 및 그림 41 참고).
- 중동 지역 자원부국은 대외의존도(수출과 수입의 GDP 내 비중)가 60% 이상을 상회하고, GDP 중 제조업의 비중도 매우 낮아 에너지 자원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표 17.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자원부국의 GDP 성장률 및 주요 경제부문별 비중

(단위: %)

	GDP 성장률 및 변동폭					대외 의존도	재화 수출 내 비중				산업별 비중				세계생산 순위
	2006	2009	2012	'06~'12	'09~'12		농식품	제조품	에너지 자원	광물	농업	공업	제조	서비스	
알제리	2.0	2.4	2.3	0.3	-0.1	64.6	0.3	1.5	97.7	0.5	7.5	61.9	5.4	30.6	가스 8위
이집트	6.8	4.7	1.9	-4.9	-2.8	59.8	13.5	31.2	43.9	4.7	14.0	37.2	16.1	48.8	가스 12위
이란	6.2	4.0	-2.0	-8.2	-5.9	56.1	5.0	11.5	78.7	2.2	10.3	44.3	10.7	45.5	원유 4위
쿠웨이트	8.1	-7.8	5.4	-2.7	13.2	89.8	0.2	4.0	95.6	0.2	N/A	N/A	N/A	N/A	원유 11위
나이지리아	7.5	5.6	6.7	-0.8	1.1	70.0	3.1	3.9	92.2	0.4	32.5	42.0	2.7	25.5	원유 8위
카타르	18.6	8.6	4.5	-14.1	-4.2	89.7	0.0	6.2	86.6	0.1	N/A	N/A	N/A	N/A	가스 10위
사우디아 아라비아	3.2	0.1	4.8	1.6	4.7	89.8	0.7	8.4	89.7	0.2	2.8	63.7	9.4	33.5	원유 2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5.6	-1.5	2.7	-2.9	4.3	60.3	9.9	51.2	10.1	28.6	2.9	31.4	16.6	65.7	석탄 7위
UAE	9.8	-4.8	4.1	-5.7	8.9	135.9	1.0	3.2	62.7	1.1	1.0	55.9	9.6	43.1	원유 9위
잠비아	6.2	6.1	6.7	0.5	0.6	72.2	9.8	7.2	0.7	82.0	19.5	36.3	10.7	44.1	구리 8위

주: 2005~11년 평균 및 2010년 기준 자원 생산 순위, (나이지리아 수출의 GDP 비중은 2008~11년 평균자료임) 일부 자료 부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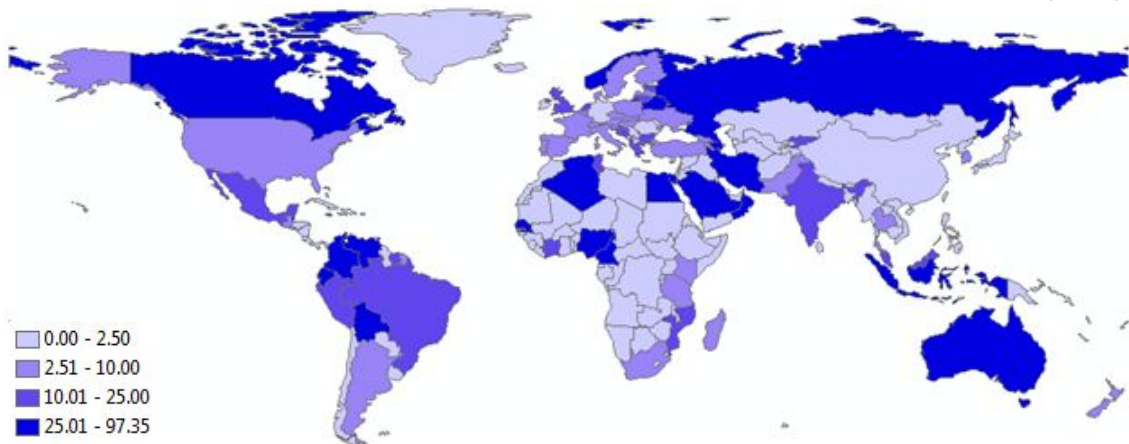
■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중동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변동도 크게 나타나는 모습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 활황기인 2006년과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던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2012년도 성장률과 비교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성장률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카타르는 2006년 대비 2012년 성장률 변동폭이 -14.1%포인트에 이르고, 이란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2012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면서 2006년 대비 성장률 변동폭이 -8.2%포인트에 이를 전망이다.
-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UAE)는 2009년 대비 2012년 성장률 변동폭이 클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성장률 하락폭이 커지면서 기저효과가 큰 것에 기인하며,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2009년 이후 성장률 변동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재화수출 중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

(단위: %)



주: 2005년부터 2010년의 평균, 데이터베이스 내 일부 국가의 자료 부재 지역은 0%로 처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 중남미 지역의 자원부국은 에너지 자원과 광물 수출로 분산됨.

- 중남미 지역의 주요 자원부국은 중동 지역보다 대외 의존도가 낮고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구리나 철광석 등 광물류의 수출 비중도 상당분을 점유함(표 18 및 그림 42 참고).
- 재화 수출에서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브라질 32.1%, 칠레 23.3%), 산업 내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브라질 66.3%, 멕시코 61.3%)에서 50% 이상을 상회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

표 18. 중남미 지역 자원부국의 GDP 성장률 및 주요 경제부문별 비중

(단위: %)

	GDP 성장률 및 변동폭					대외 의존도	재화 수출 내 비중				산업별 비중				세계생산 순위
	2006	2009	2012	'06~'12	'09~'12		농식품	제조품	에너지 자원	광물	농업	공업	제조	서비스	
브라질	4.0	-0.3	1.9	-2.0	2.3	24.9	32.1	45.5	8.4	12.2	5.6	28.1	16.6	66.3	철광석 8위
칠레	4.9	-1.7	4.8	-0.1	6.5	72.7	23.3	12.7	1.3	61.2	3.9	39.2	12.8	56.9	구리 1위
콜롬비아	6.7	1.7	4.1	-2.6	2.4	36.1	19.3	32.7	46.0	1.9	7.8	34.2	15.2	58.0	석탄 12위
멕시코	5.1	-6.0	4.0	-1.2	9.9	58.6	6.2	75.2	15.2	2.5	3.8	34.9	18.1	61.3	원유 7위
페루	7.7	0.9	5.6	-2.1	4.7	49.0	20.9	15.3	10.8	52.9	7.4	35.9	16.0	56.7	구리 2위
베네수엘라	9.9	-3.2	4.6	-5.3	7.8	49.3	0.3	5.2	92.7	1.7	4.1	56.2	15.4	39.8	원유 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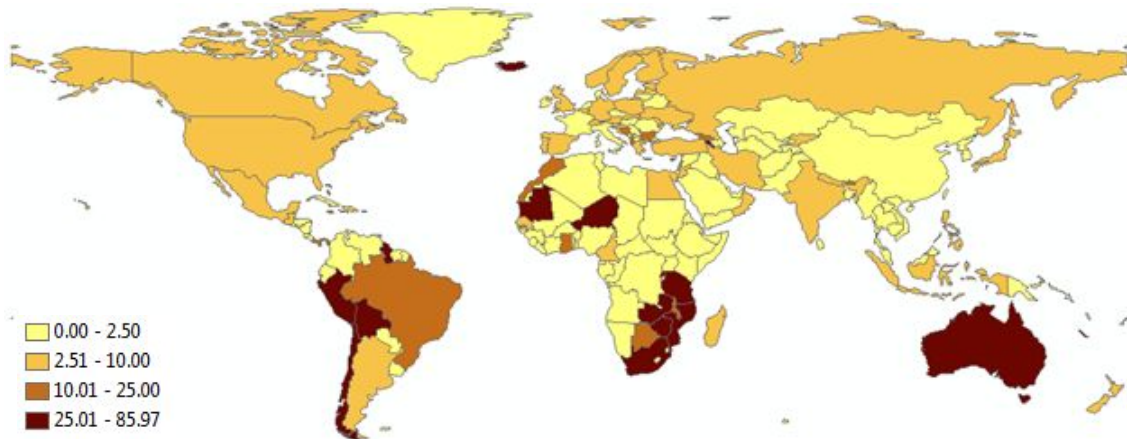
주: 2005~11년 평균 및 2010년 기준 자원 생산 순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Global Insight.

■ 산업 구조별로 중남미 지역 자원부국의 최근 경제성장률 변화도 상이함.

- 에너지 자원의 수출비중이 높은 베네수엘라는 2006년 대비 2012년 성장률 변동폭이 -5.3%포인트로 광물자원 보유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멕시코도 농업 비중이 낮고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2009년 대비 2012년 성장률 변동이 9.9%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산업내 농업 비중이 높은 콜롬비아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브라질은 2006년 대비 2009년 성장률 하락폭이 각각 5.0%포인트와 4.3%로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성장률 변동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그림 42. 재화수출 중 원석 및 광물(Ores and Metals) 수출 비중

(단위: %)



주: 2005년부터 2010년의 평균, 데이터베이스 내 일부 국가의 자료 부재 지역은 0%로 처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CIS 지역 자원부국도 대외경제 변화에 취약함.

- 러시아는 2006년 대비 2009년 성장률 하락폭이 16%포인트로 분석 대상 자원부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카자흐스탄도 2006년 대비 2012년 성장률 하락폭이 -5.9%로 자원부국 중에서는 이란을 제외하고 쿠웨이트 다음으로 하락폭이 제일 크게 나타남.
- 카자흐스탄은 GDP 중 수출 비중이 48.5%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분이 에너지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수출에서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면서 대외경제 변화에 민감함(표 19 참고).

■ 아시아 지역의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비중이 높고 경제성장률 변화도 제한적임.

- 인도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에도 7.1%의 성장을 기록한 후 2006년도 이후 성장률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나 다른 자원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산업내 농업 비중이 14.1%로 높고, 에너지 자원 비중이 중동 국가에 비해 낮아 2006년 대비 2012년 성장률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9. 기타 자원부국의 GDP 성장률 및 주요 경제부문별 비중

(단위: %)

	GDP 성장률 및 변동폭					대외 의존도	재화 수출내 비중				산업별 비중				세계생산 순위
	2006	2009	2012	'06~'12	'09~'12		농식품	제조품	에너지 자원	광물	농업	공업	제조	서비스	
인도	9.3	7.1	5.7	-3.6	-1.4	47.7	10.5	65.8	14.8	7.0	18.1	28.2	15.4	53.7	석탄 3위
인도네시아	5.5	4.6	6.0	0.5	1.4	54.7	20.8	41.9	27.9	9.4	14.1	47.2	26.8	38.7	구리, 석탄 5위
카자흐스탄	10.7	1.2	4.8	-5.9	3.6	84.6	4.0	13.8	69.3	12.9	6.0	41.5	12.5	52.6	석탄 10위
러시아	8.2	-7.8	3.6	-4.6	11.4	52.2	4.5	16.8	61.4	6.7	4.5	36.4	17.1	59.1	원유 1위, 가스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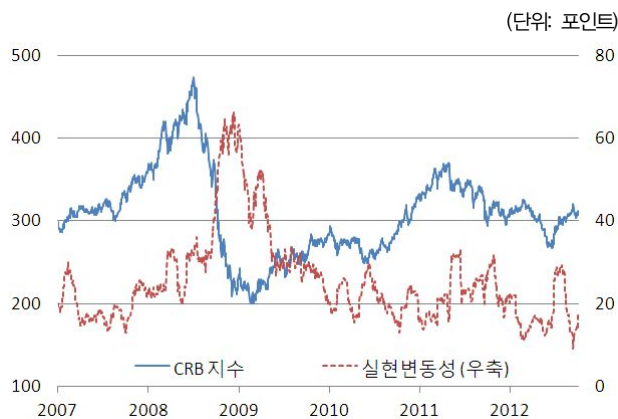
주: 2005~11년 평균 및 2010년 기준 자원 생산 순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Global Insight.

■ 자원부국은 2013년 주요 세계 경제권 성장과 맞물려 제한된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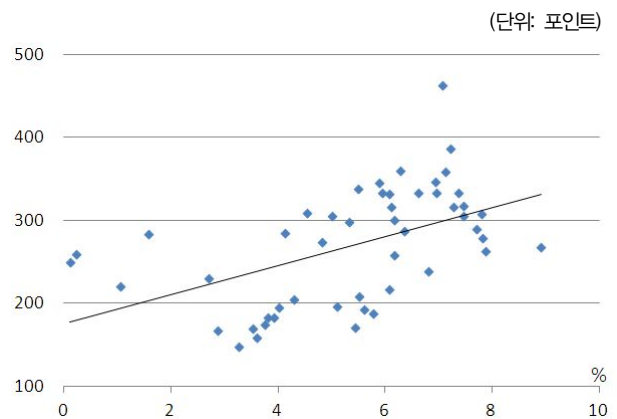
- 자원부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기 변동과 자원가격 상승률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나, 2013년 주요 자원 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평균 4%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에너지 가격이 지정학적 우려와 글로벌 유동성 증대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의 성장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1년 이후 글로벌 경기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상품가격 변동도 제한되는 모습임(그림 43 참고).
- CRB 지수와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성장률이 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그림 44 참고), 최근의 CRB 지수 수치(300)이하에서는 경제성장률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상품가격 변동성과 CRB 지수



주: S&P GSCI 상품지수 30일 실현변동성(realized volatility).
자료: Bloomberg.

그림 44. 자원부국의 GDP 성장률과 CRB 지수



주: 2000~12년 2/4분기까지 분기별 GDP 성장률과 CRB 지수.
자료: Bloomberg; Global Insight.

Ⅲ. 2013년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가. 미국

1) 경제 동향

- 2012년 상반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함.
- 고용 회복 부진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 유럽 등 해외 수요 부진에 따른 기업투자 둔화 등으로 1/4분기 실질 GDP는 2.0%(전기대비 연율) 증가, 2/4분기에는 1.3%의 성장세를 시현함.

표 20.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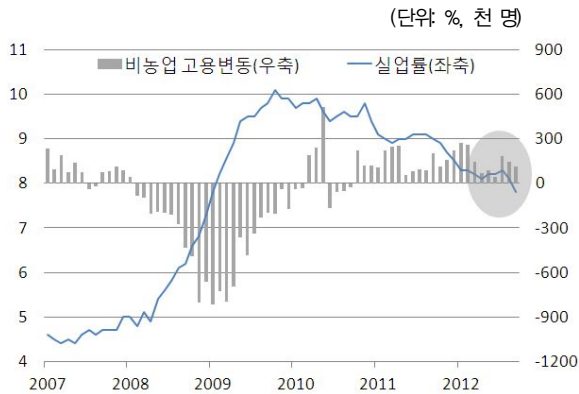
(단위: 전기대비 연율, %)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2.4	0.1	2.5	1.3	4.1	1.8	2.0	1.3
소비지출	1.8	3.1	1.0	1.7	2.0	2.5	2.4	1.5
기업투자	0.7	-1.3	14.5	19.0	9.5	8.6	7.5	3.6
주택투자	-3.7	-1.4	4.1	1.4	12.1	-1.4	20.5	8.5
수출	11.1	5.7	4.1	6.1	1.4	6.7	4.4	5.3
수입	12.5	4.3	0.1	4.7	4.9	4.8	3.1	2.8
정부지출	0.6	-7.0	-0.8	-2.9	-2.2	-3.1	-3.0	-0.7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12년 9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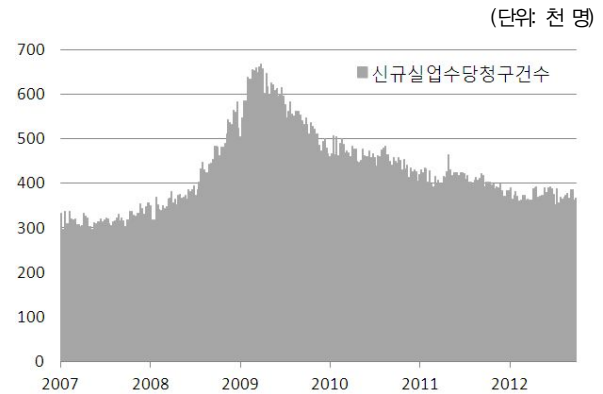
- 고용시장은 개선 중이나 전반적인 회복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2년 중(1~8월) 8%를 상회하였던 실업률이 9월에는 7.8%로 하락하여 2009년 1월(7.8%)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를 고용시장의 개선신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임.
 - 2012년 실업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구직 포기자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최근 발표된 9월 실업률이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이 아닌 취업자 증가에 수반된 질적인 개선 때문인 것으로 해석함.
 - 그러나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광의실업률(U6)은 전월과 동일한 14.7%로 변동이 없었음, 고용시장의 개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2012년 1/4분기 평균 22.6만 명으로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4분기에 6.7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3/4분기에는 14.6만 명 증가를 기록함(그림 45 참고).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012년 평균(1~9월) 37.4만 건을 기록하여 전년(40.9만 건)에 비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그림 45. 비농업부문 고용 및 실업률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2년 10월).

그림 46.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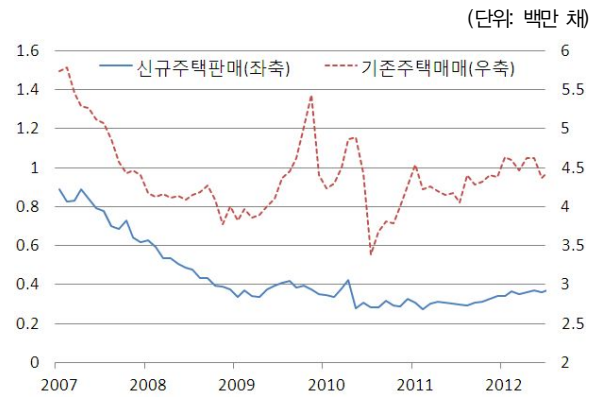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2년 10월).

■ 주택시장 회복세는 점차 강화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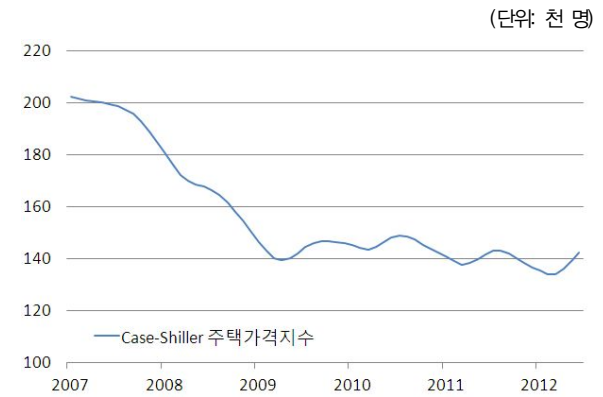
- 신규 주택판매(1~8월)는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한 연 36.2만 채를 기록하였으며, 기존 주택판매(1~8월)도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연 458만 채를 나타냄.(그림 47 참고).
-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2월 134.1에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여 7월에는 144.6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그림 48 참고).

그림 47.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지수



자료: 전미부동산협회(2012년 9월).

그림 48.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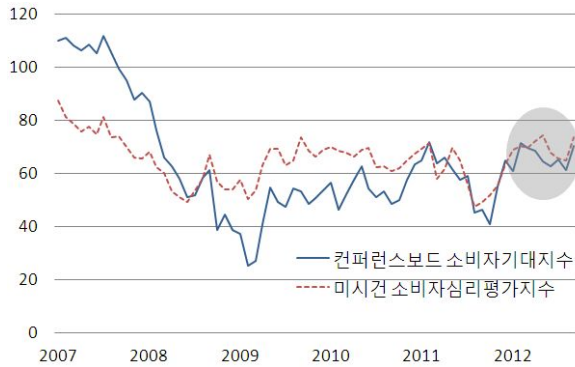
자료: Case-Shiller(2012년 9월).

■ 소비심리지표는 소폭 개선

-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와 미시건 소비자심리평가지수는 연초에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하였으나, 2/4분기 이후 하락하다가 9월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함(그림 49 참고).
 -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2012년 1월(61.1) → 2월(71.6) → 3월(69.5) → 6월(62.7) → 8월(61.3) → 9월(70.3)
 - 미시건 소비자심리평가지수: 2012년 1월(69.1) → 2월(70.3) → 3월(69.8) → 6월(67.8) → 8월(65.1) → 9월(73.5)
- 소매판매지수는 2012년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였으나 7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그림 5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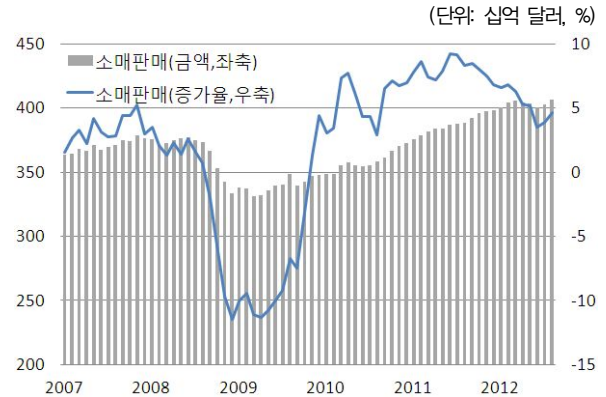
- 2011년 7월(전월비: 0.3%/ 전년동월비: 9.2%) → 9월(1.0%/8.5%) → 12월(0.0%/6.8%) → 2012년 1월(0.6%/6.6%) → 2월(1.0%/6.8%) → 3월(0.4%/6.3%) → 4월(-0.5%/5.3%) → 5월(-0.1%/5.2%) → 6월(-0.7%/3.5%) → 7월(0.7/4.0%) → 8월(1.2%/5.0%) → 9월(1.1%/5.4%)

그림 49. 컨퍼런스보드 및 미시건 소비자심리평가지수



자료: 컨퍼런스보드(10월); 미시건대학조사연구소(9월).

그림 50. 소매판매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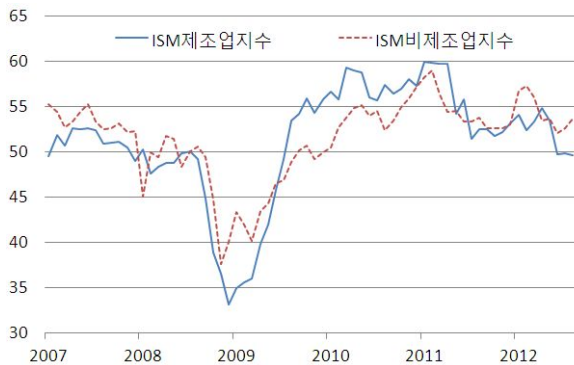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9월).

■ 제조업 경기지표는 혼조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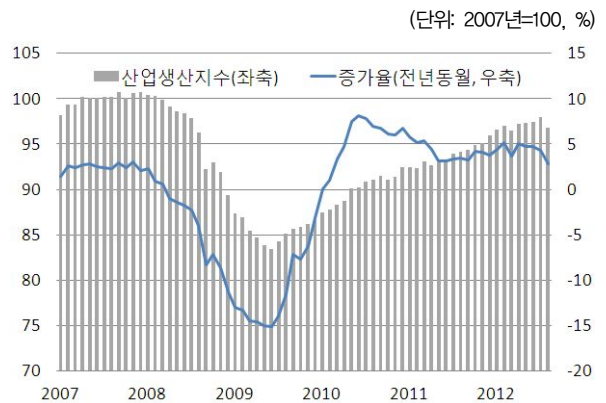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ISM 제조업활동지수는 2/4분기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후 9월 51.3으로 반등하였으며, ISM 비제조업지수는 7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그림 51 참고).
- ISM 제조업활동지수는 6~8월 3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하여 경기위축 국면을 의미함.
- 반면 산업생산지수(1~9월)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여 2011년(4.2%)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8월(2.6%)과 9월(2.8%)에는 증가세가 둔화됨(그림 52 참고).

그림 51. ISM 제조업 및 비제조업지수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그림 52. 산업생산활동지수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9월).

2) 정책 현안 및 방향

■ FRB는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2015년 중반까지 지속할 예정임.

- FRB는 미국경제에서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은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함.
- 이에 FOMC 회의(9월 12~13일)에서 추가적인 완화정책 없이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별도의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매월 모기지 담보증권(MBS) 400억 달러 규모 추가매입 등 3차 양적완화 정책(QE3) 실시를 결정함.
- 아울러 초저금리 유지기간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정도 연장하고 이미 실시 중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2012년 말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함.
- 버냉키 FRB 의장은 고용시장 전망 개선 시까지 MBS 이외에도 추가 자산매입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을 천명하는 등 현 경제개선 속도가 예상에 비해 저조하다고 분석하고, 2012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1.9~2.4%에서 1.7~2.0%로 하향 조정함.

■ 재정절벽의 현실화와 미국정부 채무위기 가능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설 증대

- 미국 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을 2011년 8월에 통과시켰지만, 이후 의회의 추가합의 실패로 2013년부터 재정지출 자동감축에 직면함.
-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2013년 경제성장률이 -0.5%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8.2% (2012년 4/4분기)에서 9.1%(2013년 4/4분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모든 재정긴축조치가 현행 법령대로 시행되면, 2013년 재정적자 감축규모는 부시 감세안 종료(2,250억 달러), 급여세 인하조치 종료(850억 달러) 및 재정지출 자동삭감(1,093억 달러) 등 총 5,600억 달러(명목 GDP 3.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연방정부 채무가 법정한도인 16조 3,940억 달러에 근접함에 따라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경우처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대두됨.

■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확대, 보호주의 정책을 병행하여 미국의 무역이익 극대화 추구

-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무역 체결국과는 무역장벽 제거에 중점을 두고, 미체결국과는 권역별 경제통합을 통한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에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주요 수출시장으로 아시아태평양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 외 다른 지역은 TPP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 2013년 경제 전망

■ 제3차 양적완화 정책(QE3)의 효과는 여전히 의문임.

- FRB가 모기지 증권을 매월 400달러씩 무기한 매입하기로 결정한 제3차 양적완화 정책의 실시 배경은 고용 시장 개선이 예상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미국경제의 경기하강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임.
- 제1차 및 제2차 양적완화 정책은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직접적으로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제3차 양적완화 정책은 장기금리 인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시사함.
 - 제1차 양적완화 정책(2008년 12월~2010년 3월): 국채매입(3,000억 달러), 모기지담보부채권 매입(1조 2,500억 달러)과 공공기관채(2천억 달러) 등 1조 7,500억 달러 규모
 - 제2차 양적완화 정책(2010년 11월~2011년 6월): 국채매입(6,000억 달러)
- 제3차 양적완화 정책은 모기지 증권매입을 통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과 고용시장 회복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질적인 금리하락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장불안 심리를 억제하여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IEP에 따르면,¹⁰⁾ 제3차 양적완화 정책은 지난 두 차례의 양적완화 정책에 비해 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 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와 투자 안정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됨.

■ 소비와 투자 부진 지속,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전망

- 주택시장 개선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시장 회복지연은 소비증가세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려면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용회복 지연과 재정절벽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은 소비증가세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가격 상승은 모기지 연체율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담보주택 차압감소로 이어질 경우 주택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인 실업률(9월)등에서 고용여건 회복을 진단해볼 수 있으나, 이 수치 또한 의미 있는 개선 신호를 나타낸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민간투자의 경우 주택경기 회복세에 따라 주택투자는 증가한 반면, 향후 경기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는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수출성장세가 감소하겠지만, 미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수입수요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2012년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1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이동은(2012),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제3차 양적완화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2-1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년 미국경제는 재정절벽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가정하¹¹⁾에 1.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에 예정되어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긴축 가능성과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을 두고 정치권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됨.
- 그러나 11월 대선 이후 재정절벽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면적인 재정절벽 시행 시에는 0.2%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더구나 대외적으로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재정절벽에 직면해 있는 미국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나. EU

1) 경제 동향

- 2012년 2/4분기 유로존의 GDP 증가율은 전기대비 -0.2%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가 진행 중임(표 21 참고).
- 2/4분기 독일은 전기대비 0.3% 성장하였으나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이탈리아(-0.7%), 스페인(-0.4%), 포르투갈(-1.2%) 등 재정위기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표 21. EU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유로존	1.9	0.7	0.1	0.1	-0.3	1.5	0.0	-0.2
독일	3.7	1.3	0.3	0.4	-0.1	3.0	0.5	0.3
프랑스	1.5	0.9	0.0	0.3	0.0	1.7	0.0	0.0
이탈리아	1.8	0.1	0.3	-0.2	-0.7	0.4	-0.8	-0.7
스페인	-0.1	0.4	0.2	0.0	-0.3	0.7	-0.3	-0.4
포르투갈	1.4	-0.7	-0.3	-0.6	-1.4	-1.6	-0.1	-1.2
영국	2.1	0.2	-0.1	0.6	-0.3	0.7	-0.3	-0.7

자료: 유럽통계청(2012. 8); EU 집행위원회(2012. 5); Oxford Economics(2012. 9).

-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국(유로존 GDP의 77%)의 2/4분기 성장률은 -0.7~0.3%에 불과하며 소비, 생산 고용 등 실물지표의 뚜렷한 개선 징후가 아직 불분명함.
- 재정위기국은 2010년부터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나 2012년부터는 재정우량국의 경기도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재정위기 확산에 기인함.
- 재정위기는 유로존 내에서 ① 국채손실로 인한 금융부문 약화와 민간부문의 부채감소(deleveraging), ② 자산감소에 따른 소비감소(reversed wealth effect), ③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약화에 따른 투자침체의 경로를 통해 확산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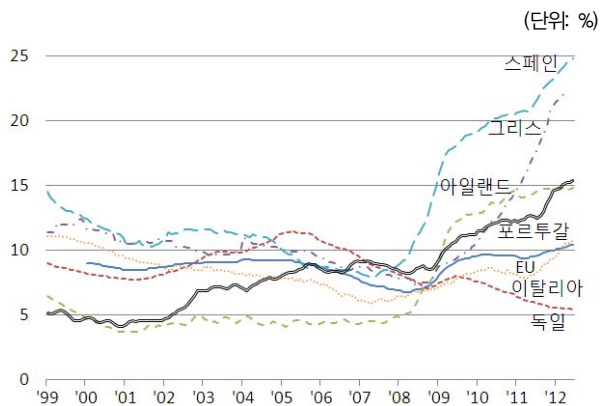
11) 재정절벽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전제는 급여세 인하 조치 등을 포함한 일부 부시 감세안 연장과 긴급실업수당 지급 종료 연장 등에 대해 양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급격한 재정절벽을 회피하는 경우를 말함.

-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들이 2013년까지 SGP의 재정적자 기준(GDP 대비 3%)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긴축을 실시 중이며, 이로 인해 정부수요 또한 감소추세임.
- o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2012년까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2013년까지 3%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 중인데 국가별로 상황은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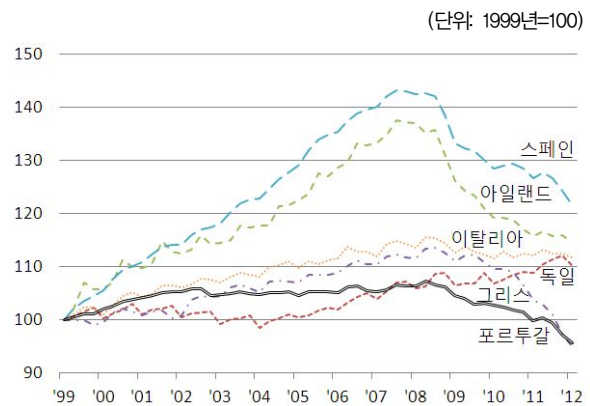
- 미국의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 중이나 EU(특히 유로존)의 고용지표는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계속 악화 중임.
- o 유로존의 실업률은 2011년 7월 10.1%에서 2012년 6월 11.2%로 상승하였음.
-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높은 반면, 북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임.
- o 국가별 실업률 차이가 심한 이유는 경기적 측면 외에도 EU 내 노동시장의 분절현상과 회원국별 노동시장 정책 및 여건 차이에 기인함.
- ※ 독일: 5.4%, 네덜란드: 5.1%, 오스트리아: 4.5%/스페인: 24.8%, 그리스: 22.5%, 포르투갈: 15.4%, 아일랜드: 14.8%(2012년 6월 기준).

그림 53. 유로존 주요 회원국의 실업률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54. 유로존 주요 회원국의 총고용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국채시장과 금융시장은 회복추세이나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

- 2012년 1~3월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데에는 ECB 적극적인 개입이 주효하였으나, 4월부터는 스페인 위기설, 그리스 총선, 프랑스 대선 등에 대한 우려로 다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바 있음.
- o ECB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1조 유로를 3년 만기 1%의 저금리로 유럽 시중은행에 공급한 바 있으며, 시중은행의 재정우려국 국채매입으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바 있음.
- o 그러나 4월 이후 스페인 경제위기, 그리스 총선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였음.
- 7~9월 기간 중 재정위기국의 국채금리는 하향추세를 보였고 주가도 회복세를 기록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고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큰 상황임.

■ 경기지표를 고려할 때 단기적 경기전망은 다소 비관적인 상황임.

-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산업생산지수, 신규 산업주문 등에서 2005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하향세를 기록 중임.
- 경기체감지수(선행지표) 또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최근 수개월간 독일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3/4분기에 대한 경기전망은 다소 비관적임.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재정위기 발생 이후 EU(특히 유로존)는 재정적자 통제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 · 시행 중임.

- (재정준칙 강화) 유로존은 기존의 성장·안정협약(SGP)을 강화하고 유로존 내 거시불균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통합법안(Six pack)을 시행 중임(2011년 12월 발효).
 - ※ 'Six pack' 이란 명칭은 이 통합법안이 5개의 규정(regulation)과 1개의 지침(directive)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데서 비롯함.
- (상호견제 강화) EU는 2011년 초부터 예산안 확정 전 6개월 동안 개별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 검토하는 유럽학기제(European Semester)를 운영 중임.
- (재정적자 상한선 제정) EU 25개국은 ① 균형재정, ② 재정적자 상한선(debt brake)의 국내법제화, ③ 재정준칙 위반 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12년 3월), 2013년부터 발효 예정임.¹²⁾

■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절충적 방안이 등장함.

- 재정준칙 확립과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독일에 대해 남유럽 국가들이 강경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절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EU 정상회의(6/28~29)에서는 ①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합의(성장협약), ② EU 차원의 단일은행감독기구(은행동맹) 설립, ③ EFSF/ESM의 부실은행 직접 지원, ④ EFSF/ESM의 국채 직매입 허용, ⑤ ESM의 선순위채권자 지위포기 등 5대 방안에 합의한 바 있음.
 - 이 중 ①은 프랑스의 주장이, ③은 스페인의 주장이, ④와 ⑤는 이탈리아·스페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 가능함.
- 가장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은 은행동맹 설립으로 201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 간 입장차이가 있어 수개월간 협상이 더 진행될 소지도 있음.

■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이견을 좁히고 빠른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큼.

12) 신재정협약의 공식명칭은 다음과 같음.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SCG.

-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은 점차 점진적인 재정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각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가운데 매우 느리게 진행 중임.
- 2012년에 이루어진 유로존의 거버넌스 개혁과 재정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은 과거부터 거론되었던 방안들이며, 당시로서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던 것임.
- 그러나 재정위기 확산은 통합된 금융망을 통해 단기간에 확산되고 있으며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측면이 강해 유로존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며, 특히 정치적 갈등에 의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3) 2013년 경제 전망

■ 남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소비·투자 축소를 동반한 부채감소(디레버리징)가 진행 중임.

- EU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① 민간채무의 감소, ② 고용회복, ③ 재정건전화, ④ 대외채무의 축소(유로존 내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임.
- 재정위기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는 장기적인 소비·투자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유로존을 중심으로 당분간 1% 이하의 저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로존 내의 디레버리징은 수입수요의 감소,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으로 인해 역외경제권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완화되고, 재정건전화(긴축)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경제가 성장경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3년 초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임.

■ 2013년 유로존 경제는 0.7% 수준의 저성장이 예상됨.

- 2013년 유로존 경제는 독일 등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0.7% 수준의 저성장이 예상됨.
- 유로화 약세 유지, 대형 신용 이벤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역외수출이 활성화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북부유럽이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또는 0%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은 2012년 후반부터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적어 1% 초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구 유럽 국가들은 국가별 편차가 있으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표 22. 기관별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2011	KIEP		OECD		EU 집행위원회		IMF		Oxford Economics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유로존	1.5	-0.5	0.7	-0.1	0.9	-0.3	1.0	-0.3	0.7	-0.6	0.2
독일	3.0	0.8	1.6	1.2	2.0	0.7	1.7	1.0	1.4	0.5	1.1
프랑스	1.7	0.2	1.1	0.6	1.2	0.5	1.3	0.3	0.8	-0.1	0.6
이탈리아	0.4	-1.6	0.2	-1.7	-0.4	-1.4	0.4	-1.9	-0.3	-2.3	-0.4
스페인	0.7	-1.8	-0.8	-1.6	-0.8	-1.8	-0.3	-1.8	0.1	-1.4	-2.1
영국	0.7	-0.4	1.3	0.5	1.9	0.5	1.7	0.2	1.4	-0.4	1.3

자료: OECD(2012, 5); IMF(2012, 7,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4월 자료); Oxford Economics(2012, 9).

- 유로존 내 신용 이벤트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급감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재정위기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대형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우려되는 유로존의 신용 이벤트는 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② 포르투갈의 2차 구제금융 신청, ③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상승, ④ 스페인의 경제침체 심화 등이며, 유로존 회원국 간의 정치적 갈등도 위기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유로존 차원의 공동대응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각국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리고 미국경기 회복과 중국경제의 성장세 시현 등 대외여건이 개선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음.
- ① 은행동맹 논의의 급진전 및 재정통합 강화조치 실시, ② 국채시장 안정, ③ EU 차원의 구체적인 성장프로그램 활성화, ④ 중국경제의 연착륙 이후 성장세 시현, ⑤ 대선 이후 미국경기 회복 등이 유로존 경기의 회복요인이 될 것임.

다. 일본

1) 경제 동향

- 일본경제는 연초에 내수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회복 속도가 급격히 둔화됨.
- 1/4분기 일본경제는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증가와 대지진 부흥 수요에 의한 공공투자 증가 등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1/4분기: 1.3% → 2/4분기: 0.2%).
- 민간소비는 1월부터 가계소비심리의 지속적인 개선과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정책적 효과 등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7월 이후 보조금 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소비 감소로 둔화됨.
- 대지진 이후 네 차례 대규모 추경예산(19조 엔, 2011년 GDP 대비 3.6%) 집행이 2012년 들어 본격화됨에 따라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투자가 급증함.
- 내수부진뿐 아니라 수출수요 역시 부진한 상황으로,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원자력 발전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연료 수입급증으로 7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3.4조 엔 적자를 기록함.
- 미국 경제정체, 중국과 유럽의 경제둔화를 배경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은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화력발전용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대로 급증함.

표 23.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4.5	-0.8	-2.0	-0.3	1.7	0.1	1.3	0.2
민간소비	2.6	0.1	-1.5	0.6	1.1	0.7	1.2	0.1
주택투자	-4.2	5.7	1.7	-3.0	4.8	0.1	-1.6	0.9
설비투자	0.8	1.3	-0.1	-0.9	0.3	5.5	-1.6	1.4
정부지출	2.2	2.0	0.3	0.6	0.2	0.4	1.1	0.2
공공투자	0.9	-3.5	-4.4	7.4	-1.1	-1.0	3.6	1.8
수출	24.3	-0.1	-0.4	-5.8	7.8	-3.6	3.4	1.2
수입	11.2	6.3	1.5	0.0	3.4	1.0	2.2	1.6

자료: 일본 내각부(2012. 9. 10).

■ 하반기 일본경제는 정책효과가 소진되면서 민간소비 급락으로 이어져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있음.

- 하반기에도 공공투자와 설비투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소비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경기가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 지진 복구 수요에 따른 공공투자와 설비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나 상반기 소비의 버팀목이었던 친환경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민간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수출의 경우 중국과 유럽의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여 수출 회복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경기회복 움직임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2) 정책 현안 및 방향

■ 부흥수요 및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책 등에 힘입은 내수 주도의 경기진작효과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 부흥수요에 의한 공공투자는 2012년에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2013년에는 부흥계획 완료 및 피해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책이 종료되는 9월에 신차 판매대수가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2년 4/4분기 민간소비와 실질 GDP는 각각 전기대비 -0.90%포인트, -0.54%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이와종합연구소(2012. 9. 10)가 부흥수요에 의한 공공투자 및 부흥증세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한 결과, 실질 GDP 기준으로 경기진작효과는 2012년 0.98%, 2013년 0.94%, 2014년 0.66%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 엔고 및 해외경기 둔화, 일본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은 하반기에도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

- 수출은 엔고 및 생산 기반의 해외이전 가속화,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수입은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연료 도입이 증가한 결과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됨.

- 2012년 상반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32.6조 엔(전년동기대비 1.5%), 35.5조 엔(전년동기대비 7.45%)을 기록한 결과, 2.9조 엔의 무역적자가 발생
- 일본경제는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증가한다 해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칠 전망이다.
- 미즈호종합연구소(2012. 9. 26)는 엔고 및 신흥국의 대두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¹³⁾

■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기조를 지속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일본은 무역수지의 적자누적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3조 엔으로, 전년동기(5.5조 엔)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는데, 2007년 이후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수출입의 구조변화로 무역 적자구조가 고착화되더라도, 경상수지는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¹⁴⁾
- 일본의 높은 국가채무비율(2011년 기준 GDP 대비 212.7%)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하는바, 향후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면 결국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은행의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만으로 엔화 약세로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임.

- 일본은행은 9월 18일 자산매입기금 한도를 기존의 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증액(장기국채 5조 엔, 단기국채 5조 엔)하고, 장기국채 매입기간을 2013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결정함.
- 일본은행이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 금융완화정책' 은 △ 안정적 물가수준(1%)을 목표로 무담보 콜금리(0~0.1%)의 제로금리 정책 유지 △ 국채, 사채, CP 등을 사들이는 자산매입기금 활용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산매입기금이 35조 엔에서 80조 엔까지 증액함.
- 이러한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조치는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엔화 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조치 이후에도 엔화는 78~80엔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엔고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소비세 인상조치는 GDP 성장에 2013년에는 플러스 요인, 2014년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일본정부는 현행 5%의 소비세를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인상할 계획임.
- 2013년 소비세율 인상 이전에는 실질 GDP성장률이 0.7%포인트 정도 상승하지만, 2014년 소비세율 인상 이후

13) みずほ証券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2012.9.26), 「日本の輸出動向と今後の見通し」.

14) 信金中央金庫(2012. 9. 26), 「海外進出の加速に伴う輸出入動向と経常収支」.

에는 수요 반동 및 물가상승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1.4%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¹⁵⁾

- 2013년에는 소비세 인상조치를 앞두고 내구소비재 및 주택투자 관련 가수요가 발생하여 개인소비가 2.5조 엔, 주택투자가 1.3조 엔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일본정부는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소비세율 인상 효과에 힘입어 2014년부터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명목 GDP 대비)은 2013년 191.1%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0년 186.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일본은행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일본은행은 '전망보고서(2012. 7. 5)'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가 2012년도에 전년대비 0.2%, 2013년도에 0.7%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음.
- 다이외종합연구소는 고용자 임금의 보합세와 수입물가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2013년 CPI가 일본은행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¹⁶⁾

3) 2013년 경제 전망

■ 2013년 일본경제는 2012년 2.2%에 비해 둔화된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정책과 해외경기 여건 변화가 일본 경제성장을 좌우할 것임.
- 2012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소비 감소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에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세율 인상을 대비한 수요증가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비투자 역시 완만한 증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공공투자는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인프라 복구 사업이 완료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수출의 경우 대미 수출은 유지되는 가운데, EU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 수요가 증대되면서 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고용환경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디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이다.

- 대지진 이후 복구를 위한 일자리 수요가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2013년 실업률은 2012년 4.3%에서 4.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2년 수준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15) 齋藤太郎(2012. 9), 「消費税率引き上げによる経済への影響試算(2013~16年度)」.

16) 大和総研(2012. 9), 「デフレの原因と政府・日銀に求められる政策対応を探る」, 第174回日本経済予測.

-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규모 증액하는 방식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해 디플레이션 종식을 위한 추가 조치 압력이 증대될 것임.

■ 엔고는 2012년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환경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엔화 환율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무역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2012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 시장의 직접 개입, 추가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 등 엔고 저지를 위한 일본 당국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엔화 가치는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수출 회복과 에너지 수입 금액 감소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가 지속되면서 엔화 강세 압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됨.

2. BRICs 경제

가. 중국

1) 경제 동향

- 2012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7.6%로 6분기 연속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착륙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금융위기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경제가 2009년 1/4분기 6.2%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유로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수출침체, 내수부진과 경제구조조정 등으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됨.
-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투자와 순수출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표 24. 중국의 최근 주요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년	2012년			
		1/4	2/4	7월	8월
GDP	9.3	8.1	7.6	-	-
산업생산	13.9	11.6	10.5	9.2	8.9
소매판매	17.1	14.8	14.4	13.1	13.2
고정투자	23.8	20.9	20.4	20.4	20.2
수출	20.3	7.0	9.4	1.0	2.7
수입	24.9	6.3	6.1	4.7	-2.6
CPI	5.4	3.8	3.3	1.8	2.0
M2	13.6	13.4	13.6	13.9	13.5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 산업생산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2년 1/4분기 11.6%, 2/4분기 10.5%로 완만한 둔화추세이며, 8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하여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49.2로 9개월 만에 경기위축 신호인 50(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을 하회하면서 경기둔화 조짐을 보임.
- 생산대용지표인 전력사용량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운송량 역시 8월에 9.9% 증가하면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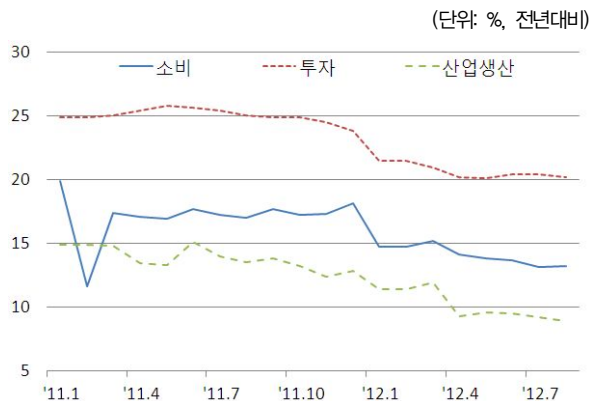
■ 소비, 투자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8월 들어 소폭으로 반등함.

- 2012년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3.2%(7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증가하여 5개월간 지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함.
- 1~8월 고정투자는 일반장비, 전용장비, 자동차 장비의 제조업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부동산 개발투자가 15.6% 증가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임.

■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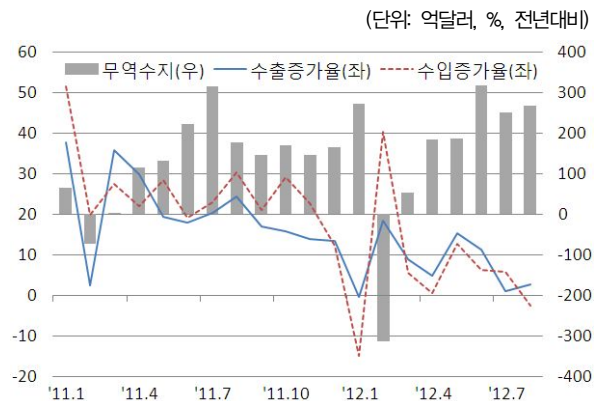
- 2012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1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월별 지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8월 들어 7월(1.0%)보다 소폭 증가한 2.7% 증가율을 나타냄.
 - 2012년 1~8월 누계기준 수출은 전년동기 7.1%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입증가율은 4.2% 증가율을 보여 순수출이 1,646억 달러로 집계됨.
- 8월 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독일(-16.1%), 네덜란드(-14.0%), 프랑스(-12.5%)에 대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12.1%) 등도 급감하고 있음.
 - PMI 신규수출주문지수도 8월 46.6%로 수축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수출증가율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55.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그림 56. 중국의 무역수지와 수출입 증가율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 물가는 식품가격 안정에 힘입어 안정단계에 진입함.

- 2011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2012년 8월 2.0%(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를 기록하면서, 1월 이후 7개월째 중국정부의 목표치 4.0%를 하회하고 있음.
 - 8월 CPI는 7월 폭우의 영향으로 채소(23.8%), 과일(9.7%)등 식품 가격(3.4%)이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하락에 따라 식품물가가 안정되면서 CPI도 안정세에 진입함.
 - ※ 식품물가: (4월) 7.0% → (5월) 6.4% → (6월) 3.8% → (7월) 2.4% → (8월) 3.4%
 - ※ 돈육물가: (4월) 5.2% → (5월) -0.6% → (6월) -12.2% → (7월) -18.7% → (8월) -18.5%
 - PPI(생산자물가지수)도 2011년 9월 6.5%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12년 8월 -3.5%를 기록함.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중앙정부는 기초 인프라 위주의 투자확대정책, 소비보조금 지급, 수출촉진책의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대형 투자프로젝트 승인건수가 급증하고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임.
 - 9월 초 NDRC가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는 25개 도시철도, 13개 도로건설, 10개 사회기반시설 등 총투자규모가 1조 위안을 상회하고, 3/4분기 들어 NDRC가 승인한 프로젝트 투자액은 5조 200억 위안에 육박함.
 - 7월 이후 저장, 구이저우, 광둥, 충칭 등 10개 성시의 지방정부들이 총 12.5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지방정부의 지출액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기대하는 낙관적인 예측치임.
 - 2012년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전제품(가전하향) 및 가구(이구환신) 구매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등 소비 진작 정책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은 소비 진작책을 통해 연평균 15%의 소비증가와 2015년까지 전체 소비재 판매액 32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2년 9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8대 무역촉진책을 확정하고 부처별로 구체안 마련에 착수 중임.
 - 8대 무역촉진책은 △ 수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률 인상(13~15% → 17% 예상) 및 환급시기 단축 △ 무역용자 규모 확대 △ 수출신용보험 규모 및 보장범위 확대 △ 수출입심사 간소화, 통관비용 인하 등 교역편의 증진 △ 중국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마찰의 합리적 관리 △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 중서부 지역의 대외개방 확대 및 국경 국가와의 경제협력 지원임.

표 25. 2012년 중국의 주요 경기부양책

분야	항목	주요 내용	비고
투자	인프라 승인절차 단축	- 연말까지 계획된 인프라 투자 승인절차 단축 - 도로건설, 도시 인프라, 항만, 공항 프로젝트 2,250위안 규모 추가 승인(9월 6일)	-
	도시철도 투자확대	- 전국 25개 도시철도 및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8,427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승인(9월 5일)	-
	42개 부문의 민간투자 세부규칙 발표	- 2010년 5월 발표한 '신36조'의 세부규칙으로, 6월까지 정부 42개 부문에서 각각 발표	2012년 6월 발표
소비	에너지 절약형 제품	- 총 503억 위안으로 절전형 제품(443억 위안),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60억 위안) 보조	2012년 6월~2013년 6월
	가전하향	- 총 129억 위안으로 9종(TV,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컴퓨터 등) 제품에 지원	2012년 1월부터 연장
	이구환신	- 오래된 가구를 새 가구로 바꾸는 경우 거래금액의 5%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북경시에서만 시범 실시중임.	2012년 3월부터 연장
	수입관세 하향조정	- 카메라, 컴퓨터 등의 수입관세를 기존의 20%에서 10%로 조정	2012년 4월 5일 실시
수출	수출세 환급	- 수출 환급세 대상 제품 범위 확대, 세금 면제 확대, 환급세 신청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2012년 7월 1일 시행
	국무원의 8대 무역촉진책	- 8대 무역촉진책을 확정하고 부처별로 구체적인 정책 확보	-

자료: 각종 언론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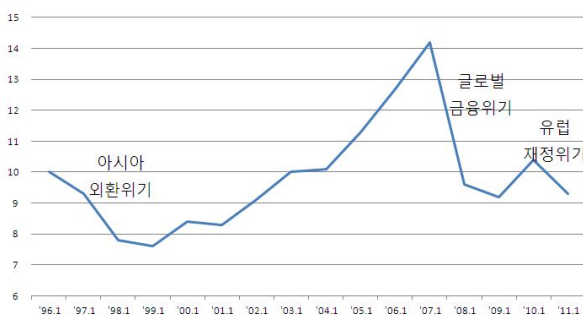
- 물가가 안정세에 진입하고 있어, 당분간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완화수단으로 기준율 및 금리 인하, 통화안정증권 발행 중단, RP 매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율을 3회에 걸쳐 총 1.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대출금리를 6월과 7월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 0.31%포인트 인하했음.
- 올해 1~8월 중 통화안정화증권 만기 도래액이 4,945억 위안에 달했으나 중국 인민은행은 추가 채권발행을 중단하고 RP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3) 2013년 경제 전망

- 2013년에는 8.3%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 중국은 과거 20년 동안 세 번의 경기하강기를 겪었으며, 이때마다 모두 재정확대 및 통화정책 기조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과잉투자, 지방정부 부채 증가, 은행의 부실채권 확대, 물가상승 압력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3년에는 기초 인프라 위주의 경기부양책을 펼칠 전망이다.
- 아시아 외환위기 시에는 3번의 금리인하, 2번의 기준율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5번의 금리인하, 4번의 기준율 인하, 유럽 재정위기 시에는 2번의 금리인하, 3번의 기준율 인하를 단행했음.
- 현재의 경기둔화는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유로 재정위기 등의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크므로, 중국정부는 소비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등을 시도하며 성장둔화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에는 중국 지도부의 교체, 중국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상태, 과거의 경기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하방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임.

그림 57.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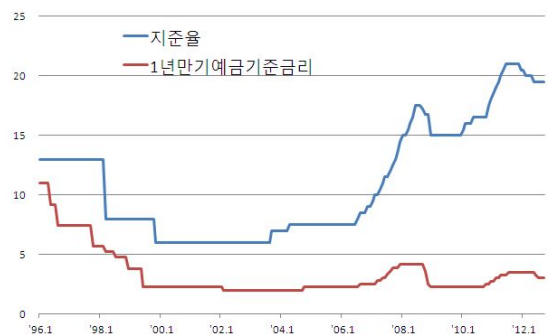
(단위: %, 전년대비)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그림 58. 중국의 기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추이

(단위: %)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 2013년은 새로운 지도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지도부의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은 2013년 가을 18기 3중전회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까지는 2011년부터 시작된 12·5규획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 서민 보장성 주택건설 확대 등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증가가 예상된다.
- o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시차가 몇 개월임을 감안하면, 2012년에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의 효과가 2013년 상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o 8월부터 신규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취득도 급증하고 있음.

■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물가를 바탕으로 향후 기준율 및 금리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민은행은 향후 정책기조의 추가적인 완화를 시사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
- 그러나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부동산 가격 반등에 대한 우려,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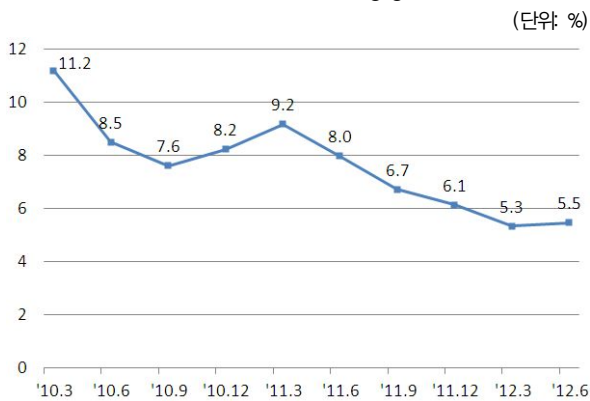
나. 인도

1) 경제 동향

■ 투자, 소비부진으로 인도의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

- 인도의 2012년 2/4분기 성장률은 5.5%로 2012년 1/4분기 5.3%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회복여부는 불확실함.
- 2012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0.1%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광업, 제조업 부문의 산업생산 둔화가 두드러짐(광업 -1.1%, 제조업 -0.7%, 전력 6.4%).

그림 59. 인도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



자료: 인도 중앙은행

그림 60. 인도의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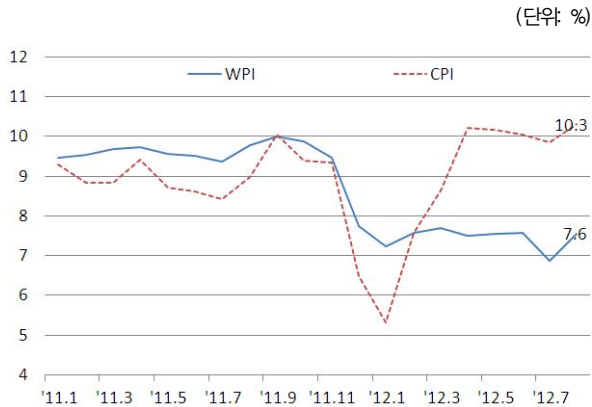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 최근 물가상승률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지난해 평균 9% 이상이었던 도매물가 상승률이 올해 7%대로 하락했지만 인도 중앙은행이 제시한 안정 수준(5.5~6%)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최근 5개월간 평균 10% 이상을 기록함.

-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루피화 가치가 여전히 달러당 50루피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유류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61. 인도의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그림 62. 인도의 환율 추이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 세계경기 둔화 및 내수 위축으로 수출입 하락 추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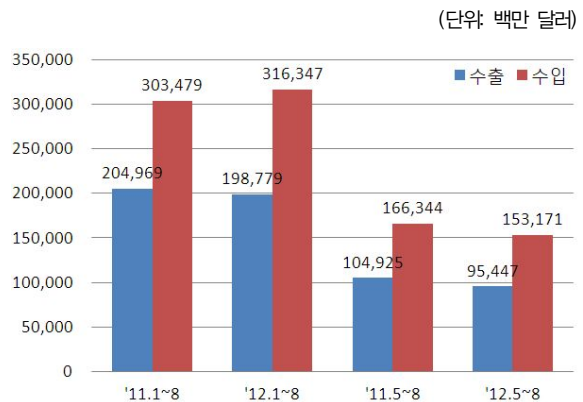
- 2012년 7월과 8월 수출증가율이 각각 -15.8%, -10.3%를 기록하며 수출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o 2012년 1~8월 수출금액은 약 1,973억 달러로 전년동기(2,039억 달러)에 비해 약 3% 감소하였으며, 최근 4개월 기준(5~8월)으로는 약 9% 감소함.
- 수입도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o 2012년 1~8월 수입금액은 약 3,1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4.2% 증가하였지만, 최근 4개월 기준으로는 약 8% 감소함.

그림 63. 인도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그림 64. 인도의 기간 별 수출입 변화



자료: ISI Emerging Markets, CEIC Data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인도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및 국가신용도 하락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잇따른 개혁개방 정책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2011년 말 야당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었던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같은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부문 개방을 포함해 항공, 전력 거래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
-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지적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연료 부문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공기업 지분 매각 조치를 발표함.
- 또한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도 현재 26%에서 49%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펀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등 2차 개혁·개방 내용이 10월 4일 내각을 통과해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표 26. 최근 인도정부의 주요 개혁 및 개방 정책

정책	발표일자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개방	9월 14일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외국인투자 51% 개방
		항공업 및 전력 거래 부분 외국인투자 49% 개방
보조금 감축	9월 13일	보조금 감축으로 디젤 가격 리터당 5루피 인상
		가구당 보조금 적용 가스통 연간 사용개수 6개로 제한
공기업 주식 매각	9월 14일	5개 공기업 주식 매각(약 1,500억 루피 세외 수입 확보 가능)
추가개방정책	10월 4일	보험업 외국인투자 49% 개방 예정
		연금펀드 외국인투자 26% 개방 예정

자료: 인도 정부, 언론자료 종합

- 하지만 상기 개혁정책에 반대 하는 좌파정당과의 대립, 반대 시위 확산 등으로 현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됨.
-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연정 파트너인 트리나몰 콩그레스(TMC: Trinamool Congress)가 연정 철회를 선언함에 따라 현 집권연정인 UPA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됨.¹⁷⁾
- 외부지지 세력인 Samajwadi Party(SP, 22석), Bahujan Samaj Party(BSP, 21석), Rashtriya Janata Dal(RJD, 4석)의 지지를 통한 과반수 확보 여부가 향후 UPA의 정책추진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¹⁸⁾
- 한편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됨.
- 인도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2012년 9월 현재 8%의 높은 기준금리(repo rate)를 유지하고 있음.
 - 9월 17일 인도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동결한 채 지급준비율을 4.5%로 25bp 인하함.

17) UPA와 연정을 구성했던 TMC는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 TMC는 인도 하원(Lok Sabha)에서 총 19석을 보유하고 있음.

18) SP와 BSP는 현재 멀티 브랜드 소매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10월 초에 두 정당은 UPA 지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

- 인도 중앙은행은 2010년 1월 이후 총 13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8.5%까지 인상하였으며, 금리인하는 2012년 4월 단 한 차례에(50bp 인하) 그침.
- 하지만 인도 산업계는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의 양적 완화, 금리인하 정책을 예로 들며 인도 중앙은행에 기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청함.

3) 2013년 경제 전망

- **적극적인 통화정책 및 개혁개방정책으로 2013년 성장률은 2012년보다 높은 6.5%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면 성장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유럽 등 세계경기가 2012년보다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특히 인도의 수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소매업 및 항공 부문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공기업 매각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경기회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다면 인도정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최근 인도의 물가상승률이 다소 완화 추세에 있지만 국제 상품가격 상승, 연료보조금 철폐 및 유가상승, 루피화 가치 하락 등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함.**
 - 연정붕괴 등 정치적 불안정이 가시화된다면 시장개방 및 보조금 축소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임.

다. 러시아

1) 경제 동향

■ 2012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약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4.5%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경제는 1/4분기 4.0%, 2/4분기 4.9%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7월에 3.0%, 8월에 2.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상고하저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랄산 석유 평균가격은 1/4분기 배럴당 117달러에서 2/4분기 106.8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110달러대로 반등하였으며, 연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 생산과 내수 부문은 현재 성장세 유지

- 산업생산증가율은 상반기에 3.1%를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산업생산증가율은 7월에 전년동월대비 3.4%, 8월에는 2.3%로 상반기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소비부문의 경우 상반기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상반기 소비증가는 △ 임금상승,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개선 △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 소비자 금융의 확대 등에 기인함.
- 2012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가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표 27. 러시아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1년		2012년*	
	8월	1~8월	8월	1~8월
GDP 성장률*	5.2	4.0	2.8	4.0
소비자물가상승률(전월대비, 전기말대비)	-0.2	4.7	0.1	4.6
산업생산 증가율	6.2	5.4	2.1	3.1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7.0	4.2	2.3	8.8
실질임금상승률	3.9	2.3	7.8	10.0
소매거래량 증가율	8.2	5.9	4.3	6.6
수출(십억 달러)	44.5	333.5	44.1	348.2
수입(십억 달러)	30.2	205.8	29.2	213.0
우랄산 평균 유가(배럴당 달러)	109.5	109.2	113.1	110.95
환율(루블/US\$, 평균)	28.77	28.55	31.97	31.04

주: * 경제개발부 평가.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12.09.27).

■ 무역수지흑자는 지속되나 2011년에 비해 흑자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4분기 614억 달러, 2/4분기 48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로존 위기로 인한 대유럽 수출감소와 수입증가 때문임.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2년 수출액이 5,340억 달러, 수입액은 3,4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흑자가 2011년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임.
- WTO 가입 이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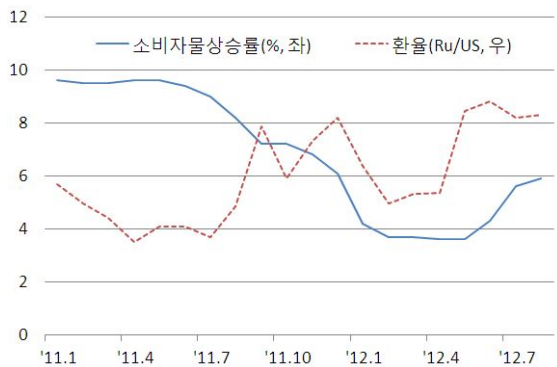
■ 2012년 순자본유출현상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2012년 5월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유출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상반기의 자금유출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최근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한 러시아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순자본유출 규모는 1/4분기 339억 달러, 2/4분기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3/4분기와 4/4분기 자금유출규모는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은 7%, 환율은 현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과 7월 공공요금 인상 단행 등으로 인해 연말까지 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풍작 및 공공요금 인상 지연으로 인해 올 4월에 소련 해체 이후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인 3.6%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5.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한편 환율의 경우 지난 5월에 재발한 유로존 위기로 인해 루블화의 가치가 약 11% 하락하여 달러당 32루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유가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루블화의 가치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림 65. 러시아 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2. 9. 24).

그림 66. 우랄산 석유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2. 9. 28).

2) 정책 현안 및 방향

■ 러시아 중앙은행 재할인율 8.25%로 인상

- 최근 물가상승세가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2년 9월 14일 재할인율을 8%에서 8.25%로 인상하였음.
- 이는 최근 러시아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공공요금 및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책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 8월 물가상승률은 6.3%로, 이는 중앙은행의 당초 물가상승률 목표치였던 6%를 넘어선 수치임.

■ 2011년에 발표된 사유화 계획은 내년 이후로 지연

- 러시아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통제 감소,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2017년까지의 사유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지난 7월 러시아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사유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90억 달러 상당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하였음.
- 9월 초에는 Sverbank(은행)와 Sovcomflot(운송)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정·재계에서 표출된 이견으로 인해 사유화는 결국 연기되었음.

■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터 WTO 정식회원국이 되었음.

- 이로써 관세율은 최종적으로 평균 10%에서 7%대로 3%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농산물의 경우 약 44% 인하될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자재 등에 부가해온 수출관세 인하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임.
- 가장 민감한 품목인 돼지고기, 승합차, 항공기의 경우는 2019~20년까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러시아는 최근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농업,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금항목 추가, 보조금 지급 등 잠재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어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음.

3) 2013년 경제 전망

■ 2013년은 2012년보다 경기가 나아져 약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가격은 2013년에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경제는 점차 재정 및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등의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총수출에서 약 2/3를 차지하는 석유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3년 수출액 5,000억 달러, 수입액 3,750억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2013년에 순자본유출액은 201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2011년 외국인투자증가율 22%).
- 러시아 정부는 2013년에는 순자본유출이 제로(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클레파치(Andrey Klepach)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14년에 300억 달러의 자본수지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5~6%대, 환율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정책과 농업생산 확대 지원정책의 결과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2013년 물가상승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에 유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어 루블화 가치는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경제발전 우선과제의 본격적인 실행

- 러시아 정부는 △ 금융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 예산규칙 변경과 물가상승률 하락 △ 투자환경 개선 △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 국방력 현대화 △ 혁신발전 △ 경제다각화 및 인프라 발전 △ 지역균형발전 등을 향후 3년간(2013~15년) 사회경제발전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수정하였으며, 세제개편 작업을 진행 중임.
- 산업다각화 및 수입대체정책의 일환으로 '2013~20년 농업부문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Skolkovo 혁신단지 설치,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을 위한 극동개발부 설치 등 러시아 경제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3~15년에는 새로운 예산 규칙 적용

- 2013년부터 예산제약이 석유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새로운 예산 규칙이 적용되며, 계획된 예산지출안의 5%까지 확대 지출할 수 있음.
- 지난 9월 20일 대선 이후 채택된 푸틴의 사회지출 프로그램이 반영된 2013~15년 예산안이 승인되었음.
- 2013년 총예산은 12.75조 루블(약 4,000억 달러)로 배럴당 91달러의 유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재정적자는 GDP의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 교육 및 의료 등 사회부문, 인프라 등이 정부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함.

라. 브라질

1) 경제 동향

■ 9분기 연속 성장세 둔화

- 브라질 경제는 2010년 1/4분기 정점(전년동기대비 9.3% 성장)을 기록한 이후 9분기 연속 성장세 둔화를 기록함.
- 특히 2012년 들어 경제성장세는 1%대 미만으로 거의 제로 성장을 기록함.
-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1/4분기 0.8%, 2/4분기 0.5%
-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에 따른 산업생산 및 투자하락, 대외적으로는 수출 감소에 기인함.

표 28. 브라질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11년				20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전년동기대비	4.2	3.3	2.1	1.4	0.8	0.5
전기대비	0.8	0.6	-0.2	0.1	0.1	0.4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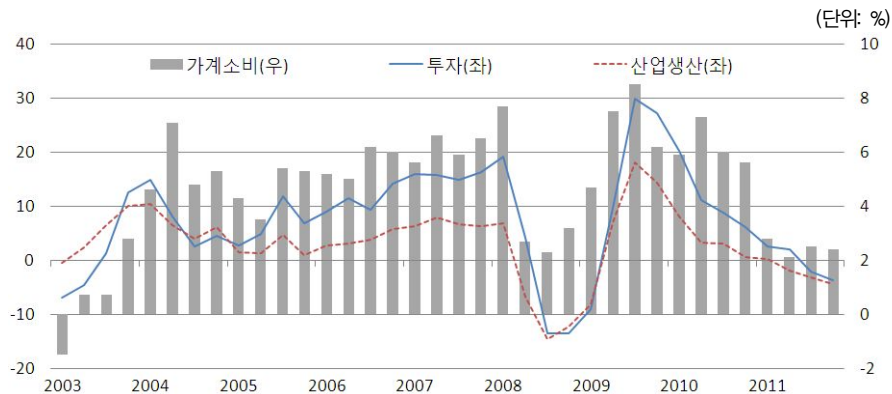
■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

- 2012년 2/4분기까지 가계소비는 3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 브라질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올해 들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가계소비 증가율: 2010년 6.9%, 2011년 4.1%, 2012년 1~6월 2.5%

■ 산업생산 지속적 하락세

- 산업생산(전년동기대비)은 2011년 6월 이후 2012년 7월까지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1~7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7% 하락함.
- 산업생산 중에서도 자본재 생산의 하락세(전년동기대비 12% 하락)가 가장 현저함.
- 소비재 중에서는 자동차 생산감소로 내구성 소비재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8.4%)함.
- 산업생산 하락의 여파로 투자도 2012년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1/4분기 -2.1%, 2/4분기 -3.7%)를 기록함.

그림 67. 브라질의 가계소비, 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원(IPEA).

■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함.

- 2012년 1~9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하락한 1,805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지역별로는 동유럽(-32.5%), 중동(-13.9%), 중남미(-10.2%), EU(-8.4%), 중국(-0.8%) 순으로 수출 하락세가 두드러짐.
- 품목별로는 통신기기(-30.9%), 설탕(-30.7%), 신발(-18.9%) 등 공산품(-5%)과 밀(-31.7%), 커피(-24.3%), 철광(-23%) 등 일차산품(-4.9%)의 수출 하락세가 현저함.
- 이 같은 수출 하락세로 9월까지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157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 경제성장률은 1.5%에 그칠 전망이다.

- 브라질 경제는 공격적인 금리인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에 힘입어 3/4분기부터 성장률이 상승 전환 될 전망이다.
- 그러나 상반기의 낮은 성장세로 2012년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성장치 2.7%를 하회하는 1.5%에 머물 전망이다.

2) 정책 현안 및 방향

■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 중임.

-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성장세가 뚜렷이 둔화되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대폭적인 금리인하(12.5% → 7.5%)를 단행함.
- 그 결과, 브라질의 정책금리(Selic)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함.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 세제 감면 △ 정부구매 확대 △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금융지원 확대 △ 전력요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함.

- 특히 2012년 8월 15일 브라질 정부는 약화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650억 달러 규모의 대단위 인프라(도로 및 철도) 개발 계획을 발표함.

■ 보호무역정책 강화

- 브라질 정부는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약화된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산 자동차 공업제품세(IPI) 인상 △관세 인상 △반덤핑 부과 △통관검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격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9. 브라질의 최근 주요 보호무역조치 현황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인상	-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공업제품세(IPI) 인상 •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한해 공업제품세(IPI, 부가가치세의 일종)를 30%포인트 인상하고 당초 적용기간을 2012년 말에서 2017년까지로 연장
관세인상	- 전자 핵심부품, 종이, 가구, 유리 등의 수입관세 인상 • 전자부품 관세 인상(12.8): 노브레이크(14% → 20%), 메모리카드(0% → 16%), 인쇄회로(10% → 12%) • MERCOSUR 공동관세 예외품목 확대: 현재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 예정
반덤핑	- 한국산 타이어 및 나일론사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 • 2012년 상반기 수입이 대폭 증가한 한국산 타이어 및 나일론사를 대상으로 7월부터 반덤핑 혐의 조사 착수
통관검사 강화	- 2012년 3월부터 화물 통관 검사 강화 조치(Operacao Mare Vermelha) 실시 • 섬유, 신발, 장남감 등 저가 수입산 제품의 대량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통관 검사 강화를 통한 수입 억제 효과 도모

자료: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 KOTRA.

3) 2013년 경제 전망

■ 2013년 성장률은 2012년보다 훨씬 높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경제는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 효과 가시화, 대외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2012년의 저성장세를 벗어나 4%의 빠른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 수출보다는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

-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브라질 경제는 내수가 경제성장을 추동할 전망이다.
- 특히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고속철 사업, 심해유전 개발 및 성장촉진계획(PAC-2) 등 대단위 국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브라질의 높은 사업기회를 겨냥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투자 증가세에 일조할 전망이다.
 - FDI 유입 규모는 2012년(560억 달러 전망)보다 약 30억 달러 증가한 59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가계소비도 대폭적인 금리인하 및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책에 힘입어 2012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침체를 보였던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글로벌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빠른 가계부채 증가는 신속한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2008년부터 브라질 정부가 실시한 소비촉진정책의 결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함.
 - 연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1년 43%로 급증함.
 -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2012년 5월 말 현재 개인의 부실여신(NPL) 비율은 사상 최고치(8%)를 기록함.
- 이 같은 높은 가계부채 비중과 부실여신 증가로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촉진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소비 주도의 성장 모델이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평가임.

■ 인플레이션 압력과 높은 환율 변동성도 2013년 브라질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헤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팽창적 재정정책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목표치(4.5%)를 상회하는 5.5%에 달할 전망이다.
-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전망으로 환율 변동이 심하겠지만 그 변동폭은 2012년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가. 동남아시아

1) 경제 동향

■ 태국과 필리핀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은 2011년 말 대홍수 피해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으로 인해 2012년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와 해외송금액 유입 지속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2012년 5.0%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수출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2012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한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
- 말레이시아는 민간소비 및 총고정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 부진으로 인해 2012년 경제성장률이 4.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표 30. 동남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2008~12년)

(단위: %)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도네시아	6.0	4.6	6.1	6.6	6.1
말레이시아	4.8	-1.6	7.2	5.1	4.3
태국	2.5	-2.3	7.8	0.1	5.1
필리핀	4.2	1.1	7.6	3.7	5.0

주: * KIEP 추정치.
자료: Global Insight(20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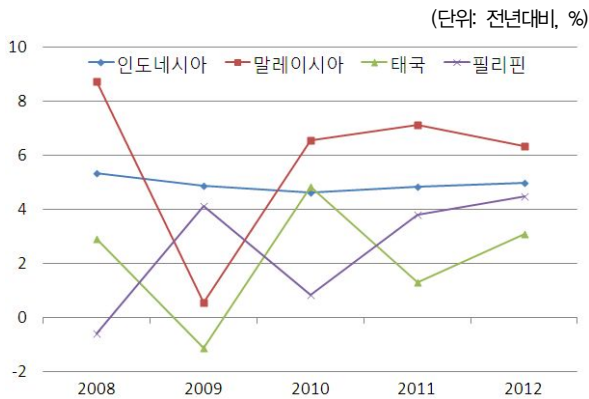
■ 동남아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꾸준히 상승

- 2012년 2/4분기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에 민간소비 부문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에도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민간소비 촉진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말레이시아도 6% 이상의 높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필리핀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4%를 상회할 것임.

■ 2012년 동남아 주요국의 수출증가율은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국가에서 하락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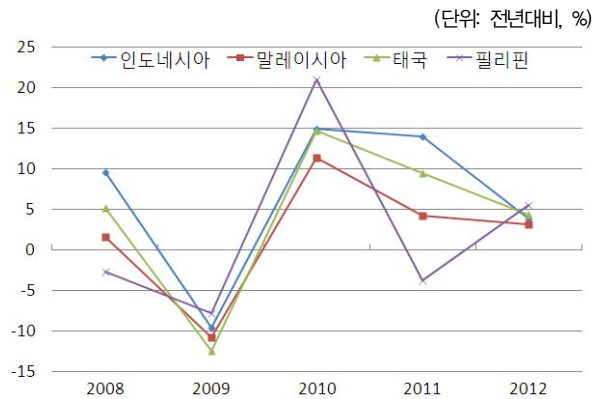
- 유럽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대외수요가 감소하여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수출증가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8. 동남아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주: 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2, 9).

그림 69. 동남아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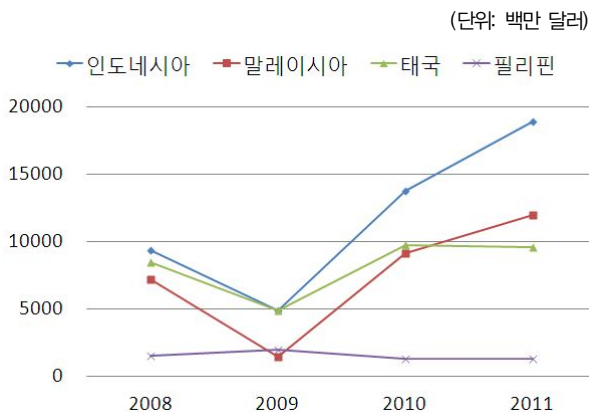


주: 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2, 9).

■ 2012년 동남아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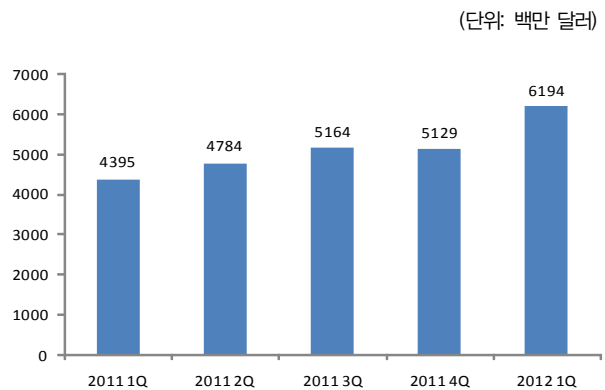
- 2011년 글로벌 저성장 중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음.
-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2012년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지만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FDI는 2012년 1/4분기에 전기대비 약 20% 증가하였음.

그림 70. 동남아 주요국의 FDI 유입 추이



자료: UN 무역개발협회의회(UNCTAD).

그림 71.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FDI 유입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2012년 상반기 필리핀 이주노동자 송금액은 전년동기보다 5.2% 증가함.¹⁹⁾

- 미국 및 유럽의 경기침체로 필리핀 이주노동자 송금액 증가율은 2012년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하였음.

표 31. 필리핀 이주노동자 송금액 및 증가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및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1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2012년 7월
전체 송금액	16,427	17,348	18,763	20,117	11,351	11,936
증가율	13.7	5.6	8.2	7.2	6.3	5.2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외국인자본 유입과 투자촉진, 민간소비 확대, 전략산업 육성 정책 등의 지속적 추진

- 인도네시아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소득세 인하 등 민간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자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포함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FDI 유치 정책을 지속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광물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 2013년부터 4,800만 명 규모의 공무원 임금 7% 인상, 비과세소득 기준 50% 인상 예정
- 말레이시아는 '경제전환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하여 관광과 팜오일 등 12대 주요 산업에 대한 부양책을 추진하고, '정부전환프로그램(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해 부패 감소 이외에도 교육 및 기초 인프라 부문의 개선 정책을 추진함.
 - 말레이시아는 GDP 대비 교역비중이 높아(2010년 기준 177%) 대외경제 악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
- 태국은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기업소득세 인하로 민간소비 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약 101억 달러의 피해시설 복구 예산배정과 지속적인 해외투자 유입 촉진정책을 추진할 것임.
 - 2011년 10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이후 2013년에도 임금인상을 계획 중이며, 2012년 초 기업소득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0%까지 인하할 예정임.
- 필리핀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PPP)을 통한 사회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2016년까지 총 80개 PPP 프로젝트(총 174억 달러)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GDP 대비 각각 -2.6%와 -2%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예정임.

19)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 주요국의 경우 GDP 대비 이주노동자 송금액이 낮지만, 필리핀의 경우 이주노동자 송금액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경기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저금리 기조 유지

- 2012년 인도네시아는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인상으로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중앙은행의 금리를 최저수준인 5.75%로 지속할 것임.
- 2012년 재정적자 GDP 대비 2.3~2.5% 수준으로 예상(EIU, 10월)
- 말레이시아는 2013년 4월 이전까지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중앙은행의 금리를 3%로 지속할 예정임.
- 2012년 말레이시아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4.5%, 2013년에는 4.0% 수준(132억 달러)으로 예상(EIU, 10월)
- 2012년 8월 태국은 2013년도(회계연도 기준)에 홍수복구 및 사회인프라 투자에 765억 달러의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중앙은행은 3%의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임.
- 2013년(회계연도 기준) 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 수준으로 예상(EIU, 10월)
- 필리핀 정부는 사회인프라 확충사업(PPP)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부문의 목표치를 균형수준에서 부(-)로 낮추었으며, 중앙은행은 5.75%의 최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

■ ASEAN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강화

- 동남아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따른 역내 갈등은 쉽게 해결 되지 않고 있음.
- 2007년 동남아 5개국(베트남 포함)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13.7%에서 2010년 15.6%로 증가(『KIEP 2012년 세계 전망』 참고, 2011)
- 2012년 하반기, ASEAN 장관회담에서 남중국해 해결에 있어 ASEAN 일부 국가가 양자 간 해결을 원하는 중국 의견에 찬성
- ASEAN은 2015년까지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가 예정되어 있고, ASEAN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최근 주도함.

3) 2013년 경제 전망

■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 대외수요 감소에 따라 자원과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정부투자 지속, 내수 강화, 외국인 투자유입 촉진, 역내협력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할 것임.
- 특히 ASEAN이 주도하는 경제협력(RCEP)이 가속화될 경우, 역내무역 증가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져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광물자원 및 제조업에 대한 대외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공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의 보

호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임.

- 인도네시아는 2014년 대선을 앞두고 보호주의 정책이 우세하며, 2012년에는 정부령을 통하여 생산 시작 후 5~10년 내에 외국계 광물기업 지분을 51% 이상을 현지인에게 양도해야 함.²⁰⁾
- 사회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촉진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활용한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것임.

■ 2013년 말레이시아는 2012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상반기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12대 주요 산업과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예상됨.
- 다만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수요가 급감할 경우 악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

■ 2013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4.6%로 전망됨.

- 태국은 2013년에도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지속되고, 기업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강화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임금상승을 통한 내수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얀마 투자를 위한 거점지로서 태국이 활용되고 있음.

■ 2013년 필리핀은 2012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5.5%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2013년 필리핀 경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해외송금액의 지속적 유입, 수출증가 등이 예상됨.

20) 김유미(2012), 「최근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12-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나. 중남미

1) 경제 동향

■ (경제성장) 2012년 들어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초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 칠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남미 경제규모의 48%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표 32. 중남미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분기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중남미
2011년 1/4	4.2	4.4	5.0	9.9	8.8	9.9	5.5
2/4	3.3	3.1	5.1	9.1	6.9	6.3	4.2
3/4	2.1	4.3	7.5	9.3	6.7	3.7	4.2
4/4	1.4	3.9	6.1	7.3	5.5	4.5	3.6
2012년	2.7	3.8	5.9	8.9	6.9	6.0	4.3
1/4	0.8	4.6	4.7	5.2	6.1	5.3	3.3
2/4	0.5	4.1	4.9	0.0	6.1	5.5	-
2012년	1.6	4.0	4.5	2.0	5.9	5.0	3.2
2013년	4.0	4.0	4.5	3.5	5.5	4.8	4.0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 성장률 둔화의 대외요인에 더해 역내 주요국의 국내요인들이 추가로 작용함.

- (대외적 영향)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세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중남미 지역의 주요 수출품인 일차산품 가격 약세, 수출감소, 간접자본 유입 및 직접투자 감소,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송금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내적 요인) 2012년 상반기 경기둔화와 2012년 성장률 전망 하락에는 대외요인보다 국내요인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주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인(경기신뢰도 하락)에 작용함.
 - 콜롬비아의 경우 공공지출 집행 지연과 커피 및 석유 생산의 일시적 감소가 경기둔화를 가속화함.
 - 그러나 멕시코는 노동 및 신용시장 성장에 따른 내수증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연초 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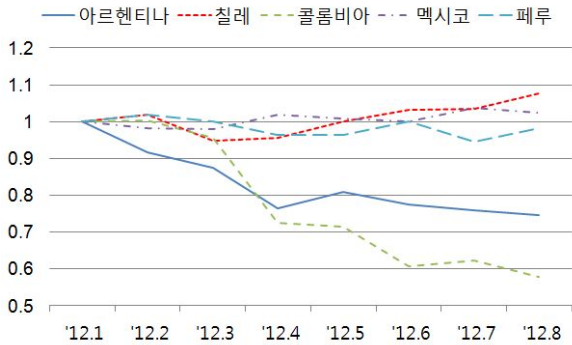
■ 기업신뢰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는 악화 추세임.

- 내수 선행지표인 양 지수는 긍정적인 수준이나 대부분 국가에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의 소비자신뢰지수와 콜롬비아의 기업신뢰지수 악화가 두드러짐.

그림 72. 중남미 주요국의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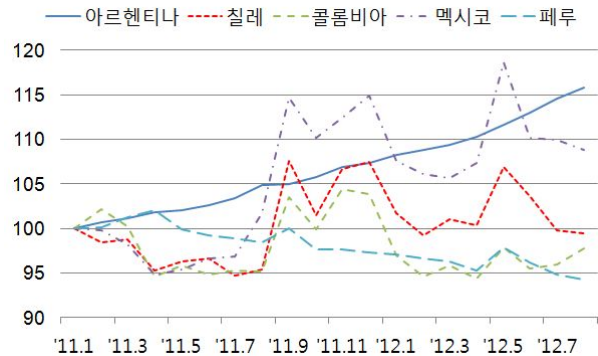
(단위: 2012년 1월=1)



자료: Tradingeconomics.

그림 73. 중남미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2011년 1월=100)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는 관리경제에 가까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성장률 둔화, 유가하락(칠레), 식량가격 약세(칠레,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세금인하(브라질)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 비록 일부 국가에서는 유가상승 전망, 미국 및 러시아 가뭄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전망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만, 대체로 중앙은행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 주요국 환율은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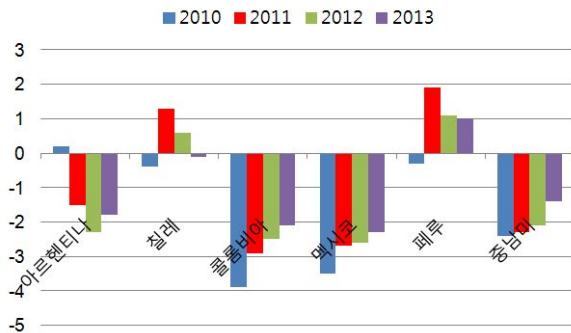
- 2012년 들어 페루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환율이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과 주력 수출품인 일차산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상승세를 기록함.
- 향후 환율은 경제성장 회복(특히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전망, 유로존 안정화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경향 약화, 곡물가격 상승 전망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재정수지는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GDP 대비 3%)에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성장률 둔화와 수출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거나 일부 국가(특히 아르헨티나, 페루)처럼 재정지출이 증가할 경우 재정관리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2012년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온 칠레(흑자) 혹은 콜롬비아(균형) 등의 관리 부담은 높지 않을 것임.

그림 74. 중남미 주요국의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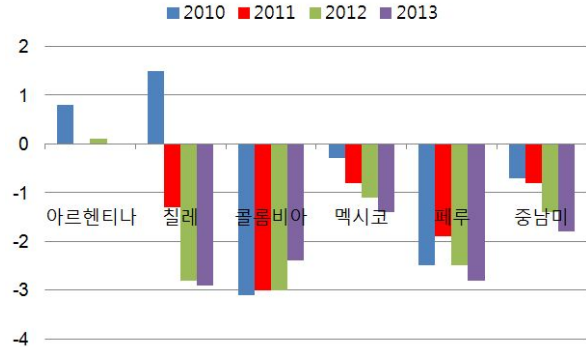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BBVA.

그림 75. 중남미 주요국의 경상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BBVA.

■ 중남미 지역의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가 경상수지 악화에 미칠 영향은 대부분 국가에서 미미함.

- 대외수요 감소, 수출상품 가격하락,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적자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 내수둔화 및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감소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여 심각한 불균형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내수증가로 연평균 GDP 대비 10%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는 파나마와 수입규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3% 이내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경기전망) 2012년 경제성장률은 하락추세 지속으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 IMF는 2012년 중남미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²¹⁾
- IMF: 3.9%(2012년 1월) → 3.7%(4월) → 3.4%(7월) → 3.2%(10월)

2) 정책 현안 및 방향

■ (통화정책)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점 결정이 중요

- 물가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대외 위험이 확장중인 내수에 미칠 영향과 목표 상한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팽창적인 통화정책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내수확장 및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이미 경기부양 목적의 금리인하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음.
- 멕시코,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국가는 급격한 경기침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3년 말 이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지만, 2012년 상반기에 다소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은 브라질(2011년 8월 이후 인하 기조 유지)과 콜롬비아(2012. 7 인하)는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 중임.

21) UN(2012),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as of mid-2012; ECLAC(2012),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Las Políticas ante las Adversidades de la Economía Internacional.

■ (주요 위험) 글로벌 충격으로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경기둔화는 불가피함.

- 중남미 지역 경제는 과거보다 취약성을 줄여왔고, 최근에는 외환보유고, 공공부채 규모, 재정 및 경상수지 등 대외취약성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개선해 왔음.
- 그러나 중남미 지역은 선진경제권 위기 및 신흥경제권 침체 심화, 그리고 역내 내수침체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부양 실시를 위한 여건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과는 1차산품 가격상승과 선진경제권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조성된 유리한 국제금융환경에서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2013년 경제 전망

■ ECLAC는 2013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

- 멕시코와 우루과이는 당초 예상과 유사하고 파라과이와 파나마가 상승 추세여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경우 전망치 이상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유로존과 미국의 적절한 위기관리와 중국 등 신흥경제권의 연착륙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수입대체효과에 따른 제조업 성장, 국제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농업 성장 전망으로 성장률은 2012년보다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국제금융시장 접근 제한, 민간투자 및 소비 위축, 재정지출 한계 등으로 2010~11년의 평균 성장률인 9%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멕시코)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 중인 멕시코는 내수와 순수출 증가에 기초해 2012년과 유사한 4.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 및 신용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계 가치분소득과 민간투자 증가에 공공투자 증가가 가세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내수확대, 대미수출 경쟁력 제고, 그리고 균형재정, 신중한 통화정책 및 견고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가 될 것임.

■ (콜롬비아) 성장률 둔화 추세는 2012년 하반기 석유, 커피 등 주력 수출품 생산 및 가격 회복과 금리인하 기초, 제도 개선(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제도, 지방 로열티 및 관리)에 기반한 공공투자 집행 원활화 등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실현으로 반전되고, 2013년 성장률은 2012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칠레) 주력 수출품인 구리 등 광업제품의 대외수요 부진과 그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 내수회복의 기초가 되는 노동 및 금융시장 부진 지속으로 성장률은 2012년보다도 둔화될 전망이다.

- 특히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균형 재정정책으로 인해 내수확대가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은 낮음.

다. 중동

1) 경제 동향

- 2012년 중동경제는 고유가와 원유수출국의 비석유부문 성장에 힘입어 5%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 원유수출국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확대에 따라 재정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비석유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힘입어 5% 이상의 경제성장이 기대됨.
 - IMF에 따르면 GCC²²⁾ 국가를 위주로 원유수출국의 비석유부문은 4.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비석유부문이 전체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 또한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수입국의 경우 시리아 내전 장기화 및 이집트 정권교체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2% 내외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됨.
 - 19개월째 지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까지 폭등했으며 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34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원유수출 증가를 통한 재정확대정책 및 비석유부문 발전으로 성장세를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2년에도 원유증산을 통한 정부수입 증가분을 고용창출과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확대와 비석유부문 투자에 사용하여 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2012년도 2/4분기 일일 석유생산량은 1,000만 배럴에 이르며, 이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외환보유고도 증가하고 있음.
 - UAE의 2012년도 원유 증산여력은 적지만 비석유부문의 높은 성장으로 IMF의 전망치인 2.3%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UAE는 모바일 통신, 관광, 금융산업 등을 필두로 한 비석유부문의 GDP 비중을 높이기 위한 내수 및 수출 증진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석유부문의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각각 5.0%, 1.1%)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리비아와 이라크는 원유수출 급증과 경제재건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로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됨.
 - 리비아는 원유생산과 수출회복 및 각종 재건사업 진행과 함께 외국인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내전으로 인한 원유생산 및 수출중단으로 -61%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리비아는 2012년 8월 현재 내전 이전 원유 생산량을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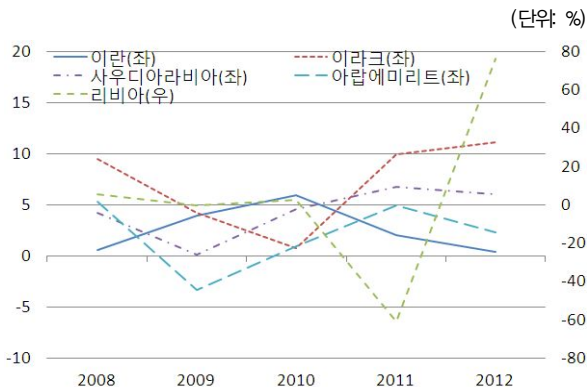
22)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6개국임.

- 이라크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흑자재정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투자예산을 전년대비 35% 확대하였고,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생산 또한 증가하여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됨.
- o 2012년 이라크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310만 배럴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총 수출규모 또한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에 따른 원유 수출 급감으로 이란의 경기침체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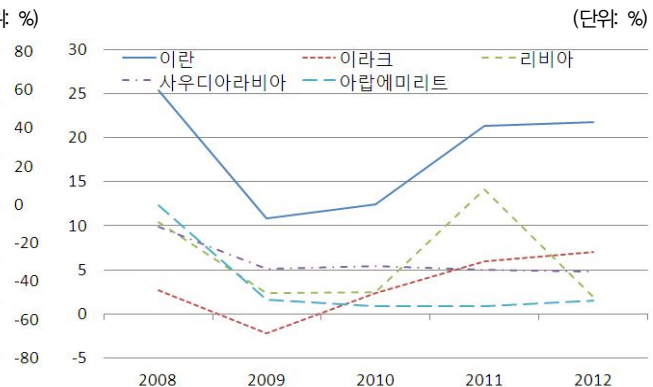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란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1990년 이래 최저수준인 290만 배럴까지 감소하였으며,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2012년 원유 수출규모는 전년의 절반 수준인 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이란 제재 강화 및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10월 초 1주일 만에 이란 리알화 가치가 40%가량 폭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올 연말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 o 최근 국제사회는 현행 이란산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와 더불어 천연가스 금수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이란에 대한 투자심리 역시 위축되어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10년, 2011년 대비 각각 68.2%, 17.9% 감소한 11.5억 달러로 예상됨.²³⁾

그림 76. 중동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 추이



주: 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2, 9).

그림 77. 중동 주요 5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2, 9).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확대정책 지속, UAE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정책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입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역대 정치변동 이후 발생한 실업난 해소와 사회 안정에 정부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23) EIU, 재인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특히 공공부문 고용확대, 인금인상 및 50만 호 주택건설 등에 2011년보다 19% 증가한 금액을 201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지출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및 제조업 육성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UAE는 누적되고 있는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로 재정지출 확대폭을 축소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및 비석유부문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음.
- 최근 재생에너지, 미디어, 금융산업 등의 각종 산업클러스터를 개발하면서 석유 중심 산업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리비아와 이라크의 치안 확보 노력 및 경제재건 사업 추진

- 리비아의 2012년도 정부예산은 544억 달러로 총 정부수입의 95%가 석유수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중 28%인 150억 달러가 주택, 전력, 항만 및 도로 같은 재건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 리비아는 부족간 분쟁, 민병대간 무력충돌 및 경찰력 부재로 인한 강력범죄 등의 치안문제가 해결되어야 외국인직접 투자의 본격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라크 정부는 국내 불안요소인 높은 실업률과 종파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군경 70만 명을 배치하여 치안 확보에 힘쓰고 있음.²⁴⁾

■ 이란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란은 원유거래 시 현물거래 또는 리알화를 이용한 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원유 수송선과 선박 (재)보험을 제공하여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행 이란 제재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비롯한 이란산 원유 수송선의 소유·운영·통제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재)보험 제공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
- 이란 정부는 최근의 리알화 폭락에 따른 물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고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음.

3) 2013년 경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대비 하락, UAE는 소폭 상승 예상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에 사회안정을 위한 재정확대 기초는 이어가되, 2012년보다 재정지출 확대규모를 축소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임.
- UAE도 정부 및 국영기업의 2014년 만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폭을 축소하겠지만, 원유 및 가스 수출의 호조와 관광·물류산업 등 비석유 부문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4) 2011년 말 미군 철수 후 이라크 내 종파간 분쟁이 급증하여 지난 9월 테러 희생자는 2년 만에 사상 최고치인 365명을 기록함.

- 2013년도에 UAE의 아부다비는 교육, 도시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각종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책대정책을 유지할 것이나, 두바이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

■ 리비아와 이라크는 석유생산 증가와 재건수요 확대로 고성장이 예상됨.

- 리비아는 2013년에 예정된 대선으로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치안이 회복되어 외국 석유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경우 원유생산량이 일일 18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리비아 정부가 향후 5년간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건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 정부가 2013년 예산의 40%인 4,290억 달러를 주택·전력·상수도 등 인프라 개발에 지출할 것으로 알려져 2013년에도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 유전지대의 생산시설이 확충되고 석유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외국 석유기업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9월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 쿠르드 지역 원유수출에 대한 합의가 석유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²⁵⁾

■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유지될 경우 이란은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됨.

- 이란 전체 수출액의 80%, 정부재정의 50%를 구성하고 있는 원유부문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원유 수출감소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로 -1%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수 있음.²⁶⁾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란산 천연가스 금수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란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표 33. 주요 기관의 중동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1	IMF		Global Insight		EIU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MENA	3.5	5.3	3.6	3.1	2.4	5.5	4.3
사우디아라비아	6.8	6.0	4.2	4.8	2.5	5.6	4.5
아랍에미리트	4.9	4.0	2.6	4.1	1.8	3.0	3.5
리비아	-61.0	121.9	16.7	53.0	32.0	34.4	12.2
이라크	9.9	10.2	14.7	7.0	5.2	8.5	8.2
이란	2.0	-0.9	0.8	-2.0	-1.3	-1.4	-1.1

자료: IMF(2012. 10), 세계경제전망(WEO); Global Insight(2012. 9); EIU(2012. 9).

25) 양 측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규모를 일일 20만 배럴로 합의하였음.

26) 이란중앙은행(2012. 7), *Annual Review*, 1389(2010/11).

라. 중앙아시아

1)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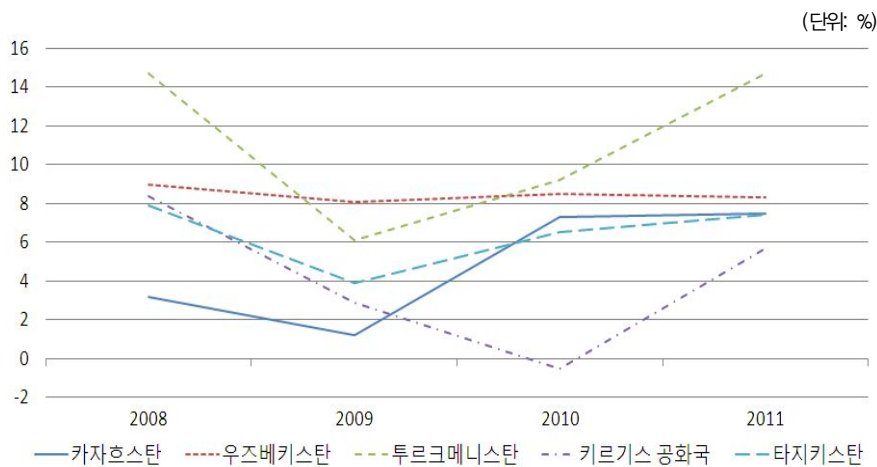
■ 2012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은 원자재 수출증가로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금, 구리, 면화의 수출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상반기 수출이 18.8% 증가하였으며, 공공투자 확대와 공무원 임금인상 등으로 전년에 이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생산 증가(전년동기대비 40%)와 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각각 12.1%, 16.1%)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확대됨.
- 타지키스탄은 전력수입 난항²⁷⁾으로 인해 주요 수출품인 알루미늄의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면화수출 증가로 당초 전망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은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키르기스공화국은 금 생산 감소로 경제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석유 수출가격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나,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키르기스공화국은 금광 개발기업과 금광 지역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생산 중단,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지대의 빙하 이동으로 인한 광산 폐쇄의 영향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림 78.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27)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4월 타지키스탄에 대한 가스 공급을 2주간 중단한 바 있음. 가스 공급 갈등의 배경은 타지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의 상수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로군(Rogun) 수력발전소 건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표 34. 중아시아 각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실질 GDP 증가율, 전년대비 %)

	2011년	2012년 상반기*	2012년		
			IMF(10월)	GI(10월)	EIU(10월)
카자흐스탄	7.5	5.6	5.5	4.8	5.8
우즈베키스탄	8.3	8.1	7.4	7.3	7.2
투르크메니스탄	14.7	11.0	8.0	8.5	7.0
키르기스 공화국	5.7	-4.6	1.0	-3.8	0.5
타지키스탄	7.4	7.4	6.8	5.9	5.0

주: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2012년 8월까지), 투르크메니스탄(7월까지).

자료: IMF(2012,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Global Insight(2012, 10), *World Overview*; 최근 각국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Country Report; 각국 통계청.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중아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은 산업다변화, 수출산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중임.

-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비에너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다변화 프로그램과 주택건설 등 분야별 프로그램 추진 등 정부 투자를 확대 중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 등의 기금과 정부재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진행 중임.
 - 러시아가 주도하는 공동경제구역에 참여 중인 카자흐스탄은 2013년까지 WTO 가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투자보호 강화와 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공공 인프라 건설 확대를 통한 수출산업 기반 조성으로 경제성장 견인에 주력함.
 - 그러나 외환통제와 과실송금 규제 같은 민간부문의 규제개혁과 무역자유화 등 사업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미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성장의 핵심인 가스수출선 다변화와 석유·가스 부문의 개발, 비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함.
 - 가스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올해 5월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가스공급 협정²⁸⁾을 체결함.

■ 키르기스 공화국은 정치 불안으로 인한 경제위축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타지키스탄은 국제기구의 금융지원 유지를 위해 경제안정화 정책에 주력 중임.

28) 일명 TAPI(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가스관에 대한 가스공급 협정으로 4개국은 2018년까지 TAPI 가스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2013년 경제 전망

- 2013년에도 중앙아시아 경제는 에너지 등 수출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국제유가 상승 전망과 석유 생산 확대, 정부 투자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세계 5대 유전 중 하나인 카사간 해상유전이 2012년 말에서 2013년 상반기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석유 생산량과 수출량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특히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과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등이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은행부문의 여전히 높은 부실채권 비율이 경제의 위협 요소임.
- (우즈베키스탄) 국제 상품가격(면화, 금 등)이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정부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정부 투자가 지속되고 외국인투자 유입이 계속 증가하면 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에너지 산업개발과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확대가 예상되어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확대, 에너지 부문 개발과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투자가 계속 경제성장의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타지키스탄) 알루미늄 생산 증가, 러시아의 경기상승으로 인한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 증가, 주요 수출품의 국제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 (키르기스 공화국) 지속적인 정치불안으로 인한 자본유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확대와 금 생산 정상화, 러시아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 증가, 기저효과로 올해보다는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됨.
 - 키르기스 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GDP 중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 비중(약 30% 수준)이 높고, 특히 러시아에 이주자가 많아 러시아의 경제회복 시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표 35. 주요 기관의 2013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IMF(10월)	GI(10월)	EIU(10월)
카자흐스탄	5.7	4.9	5.1
우즈베키스탄	6.5	6.1	6.7
투르크메니스탄	7.7	6.6	7.0
키르기스 공화국	8.5	5.1	4.0
타지키스탄	6.0	5.2	5.5

자료: IMF(2012,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Global Insight(2012, 10), *World Overview*; 최근 각국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Country Report; 각국 통계청.

마. 아프리카²⁹⁾

1) 경제 동향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성장세 유지

- 아프리카 경제는 ① 상품수요 증가 ② 자원개발 확대 ③ 저소득 국가군의 경제 인프라 개선 등에 힘입어 2012년에도 5% 내외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내전으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었던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국가들은 2012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사헬지역의 가뭄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유국의 경우 원유가격의 강세와 지속적인 석유생산 증가에 힘입어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새로운 유전이 추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앙골라나 차드 같은 국가들의 석유생산량 증가는 전반적인 산유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36. 아프리카(SSA)의 경제성장률

(단위: %)

분류	2011년	2012년(E)
SSA 전체 평균	5.1	5.4
석유수출국 평균	6.0	7.1
중소득국 평균	4.3	3.4
저소득국 평균	5.8	5.9
세계 평균	3.9	3.5

주: (E)는 추정치.
자료: IMF(2012. 4).

표 37. 아프리카의 기타 주요경제지표

(단위: %)

분류	2011년	2012년(E)
인플레이션	9.7	8.6
재정수지(GDP 대비)	-1.5	-0.7
산유국제의 재정수지(GDP 대비)	-4.5	-4.1
무역수지(GDP 대비)	-1.8	-2.0
산유국제의 무역수지(GDP 대비)	-5.5	-6.8

주: (E)는 추정치.
자료: IMF(2012. 4).

- 반면 아프리카 지역의 중소득국은 전반적으로 성장속도가 정체되는 새로운 현상을 겪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의 중소득국은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은 국가들임. 남아프리카의 경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2012년 2.7%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되며, 모리셔스, 보츠와나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29) 본고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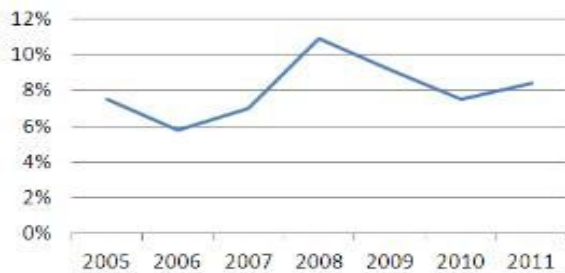
2) 정책 현안 및 방향

■ 긴축 통화정책의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가 경기위축 방지를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을 취했으나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함.
- 2011년에 아프리카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었고,³⁰⁾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했음.
- 우간다의 경우 2011년 15% 이하 수준의 정책금리를 2011년 하반기에 30% 수준까지 올린 바 있고, 케냐의 경우도 2011년 한 해 동안 금리를 3배 이상 올린 상태임.
- 각국의 긴축통화정책의 결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말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안정되고 있음.

그림 79.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물가상승률

(단위: %)



주: (E)는 추정치.
자료: AfDB(2012, 5).

표 38. 아프리카의 지역별 물가상승률

(단위: %)

분 류	2011년	2012년(E)
아프리카	8.5	8.4
중아프리카	4.5	5.5
동아프리카	17.0	16.5
북아프리카	7.4	7.0
남아프리카	6.7	6.8
서아프리카	8.8	8.5

주: (E)는 추정치.
자료: AfDB(2012, 5).

■ 석유수입국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 재정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임.

-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가 확장 재정정책을 견지해오며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됨.
- 2000년대 들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3%까지 확대되었으며, 이후 2010년 3.8%, 2011년 1.5%를 기록함.
- 특히 석유수입국은 고유가 지속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4.8%의 재정적자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지역별로는 동부 아프리카의 재정상태가 가장 취약하며, 2012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재정적자비율은 7.2%에 달할 전망이다(아프리카개발은행 2012, 5).
- 한편 고유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 아프리카 산유국의 경우 2009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³¹⁾ 오일머니를 활용한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0) 대표적으로 남수단 분리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놓여 있는 수단인 경우 최근(2012년 6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38%에 육박하고 부룬디의 경우에도 25%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석유산업에 의존적인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고실업 문제³²⁾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 주도형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3) 2013년 경제 전망

■ 201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유사한 5% 내외로 전망

-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2013년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증대가 기대됨.
- 고유가 기조에 힘입은 원유수출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중소득국도 일차상품 가격강세 기조와 내수 시장 확대에 의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임.
- 중소득국에는 남아공·보츠와나·잠비아 등 광물자원 수출국과 가나 같은 신생산유국이 포함되어 있음.
- 권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가 각각 6.4%, 5.6%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로는 신생 자원부국이자 정치여건이 안정적인 가나와 모잠비크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 내전 종전국의 기저효과와 가나의 성장세가 서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중국과 인도기업의 투자가 동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표 39. 주요 기관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IMF(10월)	UNECA&AU(3월)	AfDB(5월)	EIU(9월)	Global Insight(9월)
2012년	5.0	5.1	4.5	4.3	4.9
2013년	5.7	5.2	4.8	4.7	5.1

자료: IMF(2012.10); UNECA&AU(2012. 3); AfDB(2012. 5); EIU(2012. 9); Global Insgith(2012. 9).

■ 소비자물가상승률 대폭 하락 전망

-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시적인 긴축 통화정책 및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8.2% → 2012년 전망치 9.6% → 2013년 전망치 7.5%(IMF 2012. 4)
- 다만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의 강세기조로 인해 수입물가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석유 및 식량 수입국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의 위험이 있음.

31) 2009년 이후 아프리카 산유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IMF, 2012. 4): -6.5% → -2.5% → 4.0% → 5.2%.

32) 대표적 산유국인 앙골라의 전체 실업률은 26%, 나이지리아의 전체 실업률은 23.9%, 청년 실업률은 37.7%임.

■ 중국·인도를 비롯한 신흥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특히 중국은 2012년 7월 개최된 '제5회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에서 아프리카에 향후 3년간 2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아프리카 주요 원조공여국인 유럽과 미국의 對아프리카 자금동원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아프리카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역내 존재감이 더욱 증대될 것임. **KIEP**

【연구진】

총괄책임	박복영 국제경제실장 (bypark@kiep.go.kr, Tel: 3460-1149)
개관	이동은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장 (derhee@kiep.go.kr, Tel: 3460-1151)
성장률 전망	이동은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장 (derhee@kiep.go.kr, Tel: 3460-1151) 강은정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ejkang@kiep.go.kr, Tel: 3460-1187)
국제금융시장	양다영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dyyang@kiep.go.kr, Tel: 3460-1223)
국제상품시장	강은정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ejkang@kiep.go.kr, Tel: 3460-1187)
국제통상환경	김정곤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미국경제	고희채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유럽경제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일본경제	강형덕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원 (hdgang@kiep.go.kr, Tel: 3460-1236)
중국경제	문익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Tel: 3460-1024) 박민숙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3460-1145)
자원부국경제	문진영 신흥지역연구센터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jymoon@kiep.go.kr, Tel: 3460-1274) 김윤옥 신흥지역연구센터 전략연구팀 연구원 (yokim@kiep.go.kr, Tel: 3460-1265)
인도경제	송영철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러시아경제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브라질경제	권기수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kskwon@kiep.go.kr, Tel: 3460-1081)
동남아시아경제	박나리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nrpark@kiep.go.kr, Tel: 3460-1096)
중남미경제	김진오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Tel: 3460-1085)
중동경제	박재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jepark@kiep.go.kr, Tel: 3460-1165) 손성현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shson@kiep.go.kr, Tel: 3460-1266)
중앙아시아경제	주진홍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전문연구원 (joojh@kiep.go.kr, Tel: 3460-1053)
아프리카경제	전혜린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hljeon@kiep.go.kr, Tel: 3460-1116) 장종문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jmjang@kiep.go.kr, Tel: 3460-1225)